

2016 선거연수원 연구과제

평생교육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8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책임연구원 : 조 찬 래(충남대학교)

공동연구원 : 신 두 철(한양대학교)

정 하 윤(배재대학교)

연 구 원 : 조 예 진(고려대학교)

평생교육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8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Democratic Civic Education

提出文

중앙선거관리위원회 貴中

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뢰한 연구용역사업인 「평생교육기관·단체 등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8월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장
연구책임자 조찬래

〈연구요약〉

2015년 1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5)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평가 대상 167개국 중에 22위를 차지하였다. 지수에 포함된 5가지 부문 중 정치참여 부문이 가장 낮은 7.22점을 기록하였으며,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MBN뉴스, 2016).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이 다른 부문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을 확인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을 위한 방안들이 요구된다 하겠다.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처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안(‘민주시민교육지원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겠지만, 지난 수년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마련과 추진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평생교육기관·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즉,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선거연수원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첫째, 평생교육기관·단체의 현황 분석을 통해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둘째, 민주시민교육 실시 기관으로서 선거연수원의 현황과 그 역할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이 지니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들을 확인 한 후 평생교육시스템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의 실시 방안을 제시하였다.

평생교육체제와 공급패턴, 주요 평생교육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현황과 역할 분석을 통해 다음의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기관·단체는 다양한 명칭과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주체들 사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서로 상이한 교육초점과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고, 기본적인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평생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은 개별적·단편적·제한적 수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적공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내용 영역별로는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초·중등), 문해교육은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학점인정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결국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정치체제의 안정성, 효율성, 통합성을 제고시켜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연계체제가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와 활성화, 평생교육 정보의 개방·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안으로 인터넷 정보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이 지니는 높은 신뢰와 교육적 명성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관들 모두 시민의식 함양과 정치참여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나마 시민단체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에서 지속적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활발하게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셋째, 선관위는 민주시민교육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에 용이하며, 만약 선거연수원이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민주시민교육 부문에서 강점을 지닐 수 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니고, 시·도 선관위를 비롯하여 전국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선거연수원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인프라를 이미 갖추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통해 그 동안 민주시민교육 강사를 다수 배출하였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의내용 및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에 강점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각 교육 담당 기관들 간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공유와 활용, 네트워크 구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의 내용 및 방식이 부족하여 강사 전문성 및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선관위의 협력에 있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언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관위는 단순한 시민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참여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규모는 매우 저조할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영역에 교양·취미·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에 있어 강사 섭외의 어려움,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 등에 대한 폐강의 우려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협력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강사 수급의 어려움 보다는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에 있어서의 재정

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이 고려된 연계 방안과 동등한 파트너 주체로의 역할 정립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활발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추세에 따라, 자치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

둘째, 선관위는 중앙단위 기관 및 단체, 시·도 단위 기관 및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민주시민교육 전문 시민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협력체계 구축은 법적 체계 검토 및 법적 근거 마련, 업무협약 체결, 각 기관 간 역할 분담, 실행의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선관위가 각 단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각각의 장점과 한계가 공존하므로 이를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선관위가 중앙 단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교육부와 공동으로 각종 관련 법령을 검토함으로써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연계들을 설정하고, 민주시민교육 개발주체와 운영주체를 구분하는 등의 핵심 역할을 분담하고, 이하 산하 주무부처 간 세부 역할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시·도 단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각 지역에 적합한 조례 등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기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각 기관 담당부서 간 역할분담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강좌개설, 전문 강사 공동활용 및 자료 교환, 전문강사 양성과정, 학위과정, 온라인 강의 공동개발 등에 대한 체계 및 내용에 있어 협력하면서, 각 조직의 부서 간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경우에도 전문강사 과정,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용,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의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와 평생교육기관·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중 일부 차시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 사전교육제도 구축을 포함한 사전교육체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시민주도형 참여식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단체 관계자들과의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학습자의 수요부족(대중성 미비), 적절한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과의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교양수준으로 단기로 개설하는 경우, 인문학 수업의 형태로 수강료 없이 개설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할 것이다.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연계와 확대를 위해서 선관위의 다양한 노하우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진은 ‘시민주도형 민주시민교육 학습동아리 지원 및 운영’, ‘시민주도 민주시민교육 학습프로그램 공모 사업’, 지역사회 환경 및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제공할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퍼실리테이터’ 등을 평생교육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의 수요와 프로그램 환경을 고려하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서울과 경기도 등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수요에 적합한 3개

의 참여식과 체험·공감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일상생활 민주주의’, ‘글로벌 시대의 소프트 파워와 정치’,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정치 산책’을 개발하였다.

넷째,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법령 검토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연수원 관련 법규나 규정에 전문강사 양성 및 전문 과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과정의 내용 및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전문가 인증 과정을 구축하면서, 수료기준, 비용, 인원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양성된 강사의 활용에 있어 강사양성 이후 관리 및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방안, 전문 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축하여 수요가 있는 기관에 파견하는 방안, 소규모 모임에 강사를 파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전문강사 인증 및 자격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자격증 발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활성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평생교육연계 민주시민교육 포털사이트 설치 및 운영’,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협의체 구성’,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운영 가이드 제공 및 교수방법’, ‘선거연수원 평생교육시설 유형 변경’이, 중장기적으로는 ‘학점인정 민주시민교육 교과목 개발’, ‘민주시민교육지원법(가칭) 제정’이 뒤따라와야 할 것이다.

연구진은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질 경우 평생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선거연수원은 선거중심의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그 역할을 확인하고,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실시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정치참여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유지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II.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제도와 체계, 공급패턴	4
1.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제도와 체계	4
2. 우리나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패턴 및 공급지형 분석	6
III. 주요 평생교육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	11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11
1)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	13
2)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13
2.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14
1)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17
2)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18
3. 평생학습관	19
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1
5.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33
6.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사례	37
1) 서울시 시민교육 공모사업	37
2) 자율적 사회참여모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39
3)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40
4) 서울시민대학	41
IV.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선관위의 현황과 역할 분석	45
1.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법적 근거	45
2. 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현황	46

1) 현황	46
2) 내용	51
3) 방법	52
3. 분석	53

V. 평생교육기관·단체 등과 선관위의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1.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내용 분석을 통한 선관위의 역할	56
2. 평생교육기관·단체 등과 선관위 간 협력체계 구축	59
1) 중앙 단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60
2) 시·도 단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61
3)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의 협력체계	63
4)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65
5) 기타 협력체계 구축 방안: 교육과정교환 및 사전교육체제 구축	66
3. 평생교육 활용 시민주도형 참여식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66
1) 시민주도형 민주시민교육 학습동아리 지원 및 운영	67
2) 시민주도 민주시민교육 학습 프로그램 공모 사업	68
3) 시민참여 민주주의교육 퍼실리테이터 선발 및 운영	68
4) 체험·공감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69
5)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70
6) 지방자치단체 지원 민간단체 민주시민교육 참여자 대상 프로그램	71
4. 강사양성방안	72
1) 법적 근거	72
2) 내용 및 방식	73
3) 추진방안 및 과정	74
5. 기타 활성화 방안	75
1) 단기과제	75
(1) 평생교육연계 민주시민교육 포털사이트 설치 및 운영	75

(2)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협의체 구성	76
(3)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운영 가이드 제공 및 교수방법	77
(4) 선거연수원 평생교육시설 유형 변경	77
2) 중장기과제	78
(1) 학점인정 민주시민교육 교과목 개발	78
(2) ‘민주시민교육지원법(가칭)’ 제정	78
VI. 종합 및 협력방안	80
참고문헌	84
부록1. 2015년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기관 현황	88
부록2.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 강의 사례	98
부록3. 서울시민대학의 시민교육 강좌 사례	99

표 목 차

<표 2-1> 평생교육시설 분류 및 기능시설	6
<표 2-2> 연도별 기관유형별 평생교육 기관수(2008-2015)	8
<표 2-3> 2015년 기관유형별 평생교육기관 개황	8
<표 2-4> 기관별 프로그램의 영역별 주요 공급패턴과 요인분석	9
<표 3-1>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14
<표 3-2> 시·도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현황	16
<표 3-3> 평생학습관의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20
<표 3-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22
<표 3-5>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 현황	23
<표 3-6> 국립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24
<표 3-7> 세계화 시대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강좌의 강의계획서	27

<표 3-8>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정치학 강좌의 강의계획서 ..	28
<표 3-9> 세월호 이후의 민주주의-민주주의 다시 배우기 강좌의 강의계획서 ..	29
<표 3-10> 국립교육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	31
<표 3-11> 경인교대 부설 인천 평생교육원의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인성교육 과정 ..	32
<표 3-12> 차세대 시민리더십 교육	35
<표 3-13> 시민리더십지도자 양성과정	36
<표 3-14> 2016년 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 내용	38
<표 3-15> 2016년 자율적 사회참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40
<표 4-1> 선거연수원 교육목표 및 전략	47
<표 4-2> 2016년도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운영 현황	50
<표 4-3>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 현황	51
<표 4-4>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과 내용	52
<표 4-5> ‘민주주의 선거교실’ 교육 사례	53
<표 4-6>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선관위의 SWOT 분석	55
<표 5-1>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교육 내용	73
<표 5-2>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양성 추진단계	75

그림 목 차

<그림 2-1> 평생교육법 체계	4
<그림 2-2> 평생교육 추진체계	5
<그림 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기능	12
<그림 3-2>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추진사업	18
<그림 3-3>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중앙협의회 조직도	34
<그림 3-4> 서울시민대학 안내	41
<그림 4-1>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협력 방안	55
<그림 5-1> 선관위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	59

<그림 5-2> 대전 선관위와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의 사례	62
<그림 5-3> 선거연수원 및 서울대 평생교육원 조직체계의 사례	64
<그림 5-4> 선거연수원, 인천 선관위, 경인교대 인천 평생교육원 조직체계의 사례 ..	64
<그림 5-5> 선거연수원-KACE 조직체계의 사례	66

I. 서론

2015년 1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가 발표한 ‘2015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15)¹⁾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0점 만점에 평균 7.97점으로 평가 대상 167개국 중에 22위를 차지하였다. 지수에 포함된 5가지 부문 중 정치참여 부문이 가장 낮은 7.22점을 기록하였으며, ‘미흡한 민주주의’(Flawed Democracy) 국가 그룹에 속하게 되었다(MBN뉴스, 2016). 이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보다 향상되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시민들의 정치참여 수준이 다른 부문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을 확인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정치참여 확대와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을 위한 방안들이 요구된다 하겠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위해서는 여러 제반조건이 요구되지만, 그 중 교육도 핵심 조건으로 간주된다. 민주주의의 공고화는 국민들의 정치참여와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에 기반하며, 정치참여와 올바른 정치문화 구현은 건강한 시민의식에 기반하고, 건강한 시민의식은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교육을 통해 형성된 문화와 시민의식은 다음 세대로 되물림되며, 현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한다. 이러한 시민의식은 학교 내의 사회과 교육을 제외한다면, 성인교육 측면에서는 평생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평생교육기관, 시민단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들의 정치의식과 정치참여를 고취하여 정치체계의 안정성, 효율성, 통합성을 제고시켜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연계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기관·단체는 다양한 명칭과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주체들 사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서로 상이한 교육초점과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고, 기본적인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평생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은 개별적·단편적·제한적 수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적공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내용 영역별로는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초·중등), 문해교육은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학점인정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시민교육을 주요 업무 중 하나로 규정하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의 지속적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특히 선거 관련 시민의식 개선, 시민들의 민주적인 선거참여 역량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대부분의

1) 선거과정,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시민자유 5개 부문으로 구성되며, 각 부문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한 뒤 평균을 산출하여 국가별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지표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이루어지며, 기관의 특성상 선거·정당 관계자과정의 주를 이루고, 선거와 관련한 민주시민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보니 그 내용이 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한정되고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제한된 자원으로서는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에 있어 한계를 느끼고 있다.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독일의 사례처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안(‘민주시민교육지원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겠지만, 지난 수년간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를 위한 법안 마련과 추진은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닐 것이다. 예상되는 여러 가지 난제에도 불구하고 제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기본원칙을 토대로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주체간의 정교한 단계별 접근 방안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신두철 2014, 45).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가 이 연구의 대상은 아님을 밝혀둔다.²⁾

이 연구는 평생교육기관·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즉,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선거연수원이 상호 협력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평생교육기관·단체의 현황 분석을 통해 현주소를 살펴본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실시 기관으로서 선거연수원의 현황과 그 역할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이들 기관이 지니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들을 확인 한 후 평생교육시스템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실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선거연수원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모색은 평생교육에 있어서 민주시민교육이 뿌리를 내리고 안정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선거연수원은 선거중심의 교육기관이라는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그 역할을 확인하고, 위상을 높이게 될 것이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민주시민교육의 실시를 통해 국민들의 올바른 시민의식 함양과 사회·정치참여 확대를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미흡한 민주주의를 넘어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로 나아가는 데 일조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 연구는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선거연수원의 연계를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내용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체계 및 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생교육체계를 살펴보는 것은 평생교육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에 선행하여 살펴보아야 할 내용으로, 평생교육 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패턴을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의 총 공급량과 프로그램 내용별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2015년 평생교육통계를 통해서 거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중에 민주시민교육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시민참여교육

2)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관해서는 신두철(2014), 이상목(2007) 참조.

(Citizen Participatory Education)으로 볼 수 있는데(선거연수원, 2015), 평생교육 기관과 프로그램의 급속한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시민 참여교육은 매우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3장에서는 국내 주요 평생교육기관·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현황을 분석하였다. 중앙차원에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광역단체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시, 그리고 지방에서 평생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대전시가 해당된다. 이 외에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등이 실태 파악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들 기관은 국가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수준에서 활발하게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들이다.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요 기관들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들의 실태 파악은 선거연수원과 연계한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있어 중요한 단초로 작용하였다. 다만 연구목적과 연구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선택적 파악이 불가피한 관계로 대학들 중 선별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는 등의 제한적이고 선택적인 기관 파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밝혀둔다.

제4장은 민주시민교육 실시에 있어 선거연수원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 민주시민교육의 주체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선거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선거연수원이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있어 얼마나 정당성을 지닌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와 그 범위 등을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제5장에서는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활성화 방안은 앞에서 언급한 평생교육기관·단체가 지니는 근본적 한계와 더불어 현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근간으로 하되, 선거연수원이 실질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은 ‘평생교육 주요기관 실태조사를 통한 선관위 선거연수원의 역할’, ‘평생교육기관·단체 등과 선관위 간 협력체계 구축’, ‘평생교육 활용 시민주도형 참여식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강사양성 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되었으며, 마지막으로 ‘기타활성화 방안’은 단기 추진과제와 중장기 추진과제로 세분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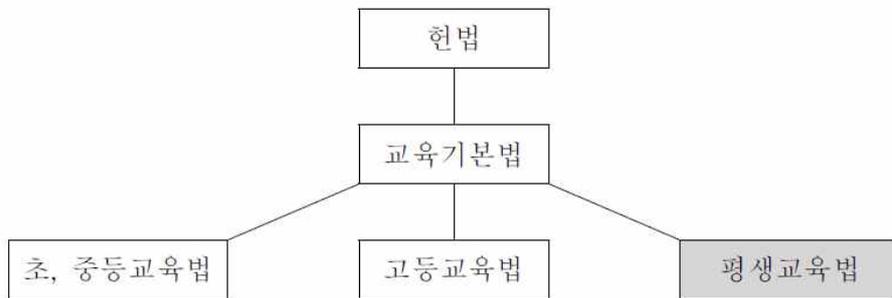
이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문헌 연구와 사례 분석, 평생교육기관 관계자와의 인터뷰, 그리고 연구진 협업과 워크숍을 통한 정책과제 도출 등으로 진행하였다.

Ⅱ.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제도와 체계, 공급패턴

1.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제도와 체계

우리나라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시민참여교육, 인문사회교육, 문화예술교육 등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며, 넓은 의미의 개인의 생애발달과정 전 단계에 걸쳐서 참여하게 되는 교육과 학습의 총체이다. 평생교육법은 교육기본법 아래,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함께 삼법 정립 체제를 이루고 있다. 법체계에서 평생교육법은 각종 평생교육 관계 법령들을 지원·육성하는 모법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림 2-1> 평생교육법 체계



우리나라 평생교육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를 평생교육의 행정기관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둘째, 평생교육을 전담하는 기구를 중앙 및 지방에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평생교육사의 자격, 양성, 배치, 임무 등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다.

넷째, 종래 등한시하여 왔던 문자교육의 문제를 취급하고 있다.

다섯째, 초·중등학교 및 대학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관련 문제를 폭넓게 포함시키고 있다.

<그림 2-2> 평생교육 추진체계



출처: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기관·단체는 다양한 명칭과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주체들 사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서로 상이한 교육초점과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고, 기본적인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보공유의 부족은 정부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보다 시민사회단체나 원격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더 심각하게 나타난다.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연계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도하에 구축되어 있는 평생교육정보망을 들 수 있지만, 기타 평생교육기관 간의 정보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이로 인해서 평생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은 개별적·단편적·제한적 수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정치체계의 안정성, 효율성, 통합성을 제고시켜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연계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평생교육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운영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중에서 민주시민교육은 매우 극소수의 교육과정이 존재할 뿐이다.

2. 우리나라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패턴 및 공급지형 분석

이 연구는 주요 연구방법으로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패턴을 평생교육법령 등록기관의 총 공급량과 프로그램 내용별 차별성 등을 중심으로 거시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적 패턴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적공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내용영역별로는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초·중등), 문해교육은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학점인정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기관유형별로는 대학(원) 및 사업장 부설기관, 평생학습관이 프로그램 공급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시·군·구 간 격차에 관해서는 구(광역시), 시 단위에 비해 군 단위 지역에서의 공급이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 주된 원인은 군 단위가 평생학습관이 주도하는 공적 공급체계에 기초하는 반면, 구·시 단위는 프로그램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대학(원) 및 사업장 부설 등에 의한 사적공급체계가 집중되어 있고 이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파악되었다.

아래 평생교육 시설 분류기준에 의하면 선거연수원은 ‘제4유형 직능단체의 특별연수기관의 평생교육’에 속하며 복합 평생교육시설(제2유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1차 선결과제일 것이다. 제2유형은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수행에 덧붙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운영하는 시설”로서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등이 이에 해당한다.

<표 2-1> 평생교육시설 분류 및 기능시설

시설 분류	정의	시설 유형
전담 평생교육 기능시설 (1유형)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평생교육실천을 주기능으로 하는 시설	평생학습관
		학교의 평생교육 (※ 현재 조사하지 않음)
		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 현재 조사하지 않음)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복합 평생교육 기능시설 (2유형)	평생교육법 이외의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본래의 기능수행에 덧붙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	교육과학기술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방계학교, 기능대학 등 (간접조사)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주민자치센터 등 (간접조사)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여성가족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여성회관, 여성능력개발센터, 청소년 수련원 등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노동부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	각종 직업훈련시설
학원(3유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 실시 기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며 개방된 다수 학습자들에게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기관	기술계 평생교육직업학원	
직능단체의 특별 연수기관 (4유형)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로서 제한된 교육대상 범위를 가짐	※ 기업체 연수원, 금융연수원, 공무원연수원, 교육연수원 등에서 공급하는 프로그램 중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만을 대상으로 조사	
비등록기관 (5유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1-4유형 기관유형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관	종교단체 부설 등	

출처: 한승희·양은아·이재열(2011).

2015년 평생교육통계에 의하면 평생교육법령에 의해 등록된 4,144개의 평생교육 기관이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총 21만여 개에 육박하고 있다. 2013년 18만개에서 2014년 20만 5천개로 최근 몇 년 사이에 공급량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다.³⁾ 학습자 수는 1,6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물론 대다수의 학습자는 원

격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형태를 제외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는 148,676(70%)개이며, 수강생은 3,939,131명(24%)이다. 프로그램 기간으로 봤을 때는 1개월 미만이 54,528(25.7%)개이며, 1개월 이상은 157,843(74.3%)개이다.

<표 2-2> 연도별 기관유형별 평생교육 기관수(2008-2015)

연도	총계	학교부설			원격 형태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 단체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 개발형태	평생 학습관
		소계	유초중 등학교 부설	대학(원) 부설						
2007	2,221	384	9	375	502	207	166	78	570	314
2008	2,620	390	12	378	611	244	244	92	681	358
2009	2,807	391	11	380	674	268	275	107	713	379
2010	3,213	400	12	388	781	298	386	203	761	384
2011	3,591	408	11	397	853	328	461	376	774	391
2012	3,768	413	10	403	887	357	495	494	727	395
2013	3,965	413	8	405	876	375	524	703	687	387
2014	4,342	411	9	402	883	392	556	1,038	669	393
2015	4,144	412	9	403	903	414	549	882	626	358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표 2-3> 2015년 기관유형별 평생교육기관 개황

구분		기관수	프로그램수	학습자수	교강사수	사무직원수
총계		4,144	212,371	16,379,570	70,835	18,833
학교부설	소계	412	28,732	825,105	15,247	1,971
	유초중등 학교부설	9	47	1,094	41	17
	대학(원) 부설	403	28,685	824,011	15,206	1,954
원격형태		903	63,695	12,440,439	10,470	5,872
사업장부설	소계	414	72,519	1,179,153	22,024	1,962

3)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평균적으로 1년에 10만개 정도가 공급되던 평생교육프로그램은 10년 이내에 2배 가까이 가파르게 상승하였다.

	유통업체 부설	369	70,519	1,091,240	20,820	1,408
	산업체 부설	45	2,000	87,913	1,204	554
시민사회단체부설		549	6,375	140,058	3,865	1,489
언론기관부설		882	5,293	188,735	4,060	2,065
지식인력개발형태		626	12,898	767,210	6,472	3,589
평생학습관		358	22,859	838,870	8,697	1,885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앞에 설명한 바와 같이 수강기간이 1개월 이하의 (초)단기 프로그램을 뺀 평생교육프로그램은 157,843개이며, 이중 원격형태의 교육과 유치중등학교 부설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약 96,000개의 프로그램이 대학 부설, 사업장 부설, 시민사회단체 부설, 언론기관 부설, 지식인력개발형태, 평생학습관 등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프라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를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내용영역별로 보면, 주로 문화예술(51.3%), 직업능력(14.5%), 인문교양(16.4%) 프로그램에 대부분 집중되어 있다. 기초문해와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공급은 전체의 1% 미만으로서 거의 제공되지 않고 있다.

각 기관별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주요 프로그램 내용은 학점인정 과목들로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약 2.5배에 달하는 양을 공급하고 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지식인력개발형태 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기관유형에서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2차적 유형에 따라서는 시민사회단체 부설기관, 지식·인력개발형태기관, 그리고 평생학습관이 전반적으로 균형 있는 공급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2-4> 기관별 프로그램의 영역별 주요 공급패턴과 요인분석

기관유형	프로그램 영역별						학점인정 여부		총계
	학력보완	성인기초/문자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인정	미인정	
대학(원) 부설	14,842 (52.88)	14 (0.05)	4,370 (15.57)	2,815 (10.03)	6,007 (21.4)	18 (0.07)	14,630 (52.13)	13,436 (47.87)	28,066
사업장 부설	44 (0.13)	3 (0.01)	1,804 (5.2)	3,274 (9.43)	29,594 (85.22)	2 (0.01)	37 (0.11)	34,684 (99.89)	34,721
시민사회단체부설	113 (2.98)	112 (2.96)	1,061 (28.01)	720 (19.01)	1,766 (46.62)	16 (0.42)	40 (1.06)	3,748 (98.94)	3,788

언론기관 부설	61 (1.42)	12 (0.28)	1,643 (38.25)	637 (14.83)	1,933 (45.01)	9 (0.21)	6 (0.14)	4,289 (99.86)	4,295
지식인력 개발형태	1,151 (12.95)	29 (0.33)	4,042 (45.48)	912 (10.26)	2,751 (30.96)	2 (0.02)	1,131 (12.73)	7,756 (87.27)	8,887
평생 학습관	431 (2.51)	375 (2.18)	1,164 (6.78)	7,508 (43.72)	7,673 (44.68)	23 (0.13)	331 (1.93)	16,843 (98.07)	17,174
총계	16,642 (17.17)	545 (0.56)	14,084 (14.53)	15,866 (16.37)	49,724 (51.29)	70 (0.07)	16,175 (16.69)	80,756 (83.31)	96,931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 퍼센트.

Ⅲ. 주요 평생교육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분석

이번 장에서는 주요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그 중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행정기관 보다는 실행기관에 중심을 두고 살펴보고자 하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평생학습관을 살펴본다. 이 외에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그리고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 사업에 대해 살펴본다.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평생교육진흥 임무를 부여하고, 중앙-광역-기초 지역 단위 평생교육추진체제를 구축하였다. 이에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2008년부터 대학 중심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새 정부 들어 제3차 국가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2013-2017)의 주요 정책 영역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의 규모가 원격형태,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기관에 이어 세 번째 규모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해당 평생교육원의 현황을 살펴보는 것은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고려된다. 다만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은 2015년 기준으로 403개에 달하므로(교육부, 2015), 이들 중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만을 대상으로 살펴본다. 이 외에도 시민교육에 있어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제시되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와 최근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과 관련 교육사업을 활발히 추진중에 있는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의 평생교육 사업을 살펴봄으로써 평생교육에서 시민교육의 현주소를 살펴본다.

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전신은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국가의 평생교육진흥과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부 산하의 평생교육 전담기구로서 2008년 1월에 설립되었다. 설립의 법적근거는 헌법 제31조 제5항4), 교육기본법 제3조5), 평생교육법 제19조 제1항6)에 명시되어 있다. 개원 당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던 ‘평생교육센터’와 ‘학점은행센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독학학위검정센터’ 등의 기능과 역할을 이관 받았다. 2012년부터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관 명칭을 변경하

4)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6) 국가는 평생교육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진흥원을 설립한다.

고, 2016년 6월 현재 1처, 4본부, 3센터, 1감사실, 16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3-1>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기능



출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 단위 평생교육 관련 정책의 집행,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등을 담당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사업,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평생학습중심대학, 평생학습계좌제, 학점은행제, 독학 학위제, 국가 자격증인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과 평생교육사 양성 및 평생교육연수사업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최근에는 지역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전 생애에 걸쳐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 확대를 통한 창조적 학습공동체 형성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평생교육체제가 안정적으로 착근되고, 시·도 평생교육 네트워크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역할하고 있다. 평생학습 정보의 개방·공유, 유관기관 콘텐츠 연계 등을 위하여 평생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고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구축하고,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을 만들었다.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과 국가평생학습포털 구축과 같은 최근의 사업들은 온라인 전달체제를 다각적으로 활용하여 평생학습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온라인 학습을 통해 세대별, 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이 두가지 사업에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1)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⁷⁾

평생교육기관 간 네트워크와 기관운영 프로그램의 통합 관리체계 부재로 인해 자료수집 및 운영관리에 있어 어려움이 존재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시·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를 수집·제공하여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도입하였다.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과 연계를 통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17개 시·도의 평생학습포털을 구축하여 정보유통을 위한 중계시스템을 도입하고, 교육운영 정보 및 기관 정보 등을 온라인 평생학습 종합서비스망과 연계하여 시·도 평생교육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표준 분류체계 적용을 통해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 및 강좌 정보에 대한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 개방형 중계시스템 등을 도입하고 있다.

2)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

늘배움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양질의 교육 콘텐츠와 평생학습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고,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학습자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평생학습종합포털이다. 평생학습 정보의 개방·공유, 유관기관 콘텐츠 연계 등 평생학습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정부 3.0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시·도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과 연계하여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강좌를 한데 모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가 원하는 지역의 강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온라인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과 소득 격차에 따른 학습기회의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한다.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기초문해교육, 학력보완교육, 직업능력교육, 문화예술교육, 인문교양교육, 시민참여교육의 6가지 주제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다. 각 주제별 프로그램은 다시 동영상 강좌인 온라인 강좌와 지역별 학습이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강좌로 구분된다. 온라인 강좌는 강좌 제공기관의 홈페이지로 연계되어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학습자가 원하는 시간에 무료로 학습할 수 있다. 오프라인 강좌의 경우 전국 시·도의 지역별 학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로그램을 선택하면 해당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 등으로 연결되어 상세 정보를 확인 가능하다. 수강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무료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하다.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 또한 다른 프로그램들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강좌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다. 온라인 강좌는 총 99개로, 프로그램별로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17개,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29개,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53개가 제공되고 있다.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의 경우 글로벌리더십, 사회적 기업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통신대OER, KOCW(한국교육학술정보원)과 한국사회적기

7) <http://www.lll.or.kr/contents/contents.jsp?bkind=html&bcode=EADAEAA&bmode=list>

업진흥원에서 제공하고 있다.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으로는 KOCW에서 제공하는 월드비전의 특강 동영상과 현대사회의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주로 제공되고 있다. 시민책무성 프로그램도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KOCW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현대사회의 윤리, 인권, 권리에 관한 프로그램과 일부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강좌들 대부분은 1회차로 구성되어 있으며, 짧은 동영상 중심이다. 이러한 현황은 온라인 강좌들 대부분이 교양수업에 가까운 내용과 단기적인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오프라인 강좌는 총 16,191개로, 프로그램별로 시민리더역량 프로그램 46개,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 14,834개, 시민책무성 프로그램 96개가 제공되고 있다.⁸⁾ 지역별로는 울산이 13,155개로 가장 많으며, 부산 2,229개, 제주 264개, 경북 262개 순이었다. 서울은 1개의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만 제공되고 있으며, 광주, 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남에서는 하나의 프로그램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

또한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오프라인 강좌들은 현대의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참여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대다수다. 공예와 플라워 아티스트, 요가, 요리 교실 같은 취미 활동, 복지 및 자원봉사교육 활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외에도 외국어 학습 강좌, 자격증반, 컴퓨터 프로그램 강좌 등도 시민참여교육 프로그램으로 분류되어 제공되고 있다. 프로그램의 단순 분류가 아닌 실제 내용이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한다. 2016년에는 오프라인 강좌 중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인천), 주민참여예산학교(인천), 인권의 이해(인천) 강좌 정도만이 개설되었다.

2.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월 현재 전북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개원 및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설립형태는 서울, 광주, 대전, 경기 4개 시·도는 법인으로, 나머지 시·도는 위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 3-1>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시도	설치시기	설립 형태	위탁(운영)기관	홈페이지
서울	`14. 04. 03	법인/설립	-	www.smile.seoul.kr
부산	`11. 03. 01.	지정	부산인적자원개발원	www.ble.or.kr

8) 홈페이지 검색일인 2016년 8월 3일 기준.

대구	`14. 02. 20	지정	대구경북연구원	www.dle.or.kr
인천	`13. 05. 09	지정	인천인재육성재단	www.damoa.incheon.kr
광주	`13. 04. 16	법인/설립	-	www.gie.kr
대전	`11. 06. 13	법인/설립	-	www.dile.or.kr
울산	`12. 07. 01	지정	울산발전연구원	www.uill.or.kr
세종	`16. 05. 30 (개원)	지정	(재)세종시인재육성재단	http://damoa.sejong.go.kr
경기	`11. 12. 28	법인/설립	-	www.gill.or.kr
강원	`14. 03. 25	지정	강원발전연구원	www.e-room.or.kr
충북	`11. 04. 20	지정	충북발전연구원	www.cblll.or.kr
충남	`12. 01. 01	지정	충남인재육성재단	www.cnile.or.kr
전북	`16년내 운영예정	지정	미정	-
전남	`14. 03. 19	지정	전남발전연구원	www.jnile.or.kr
경북	`13. 06. 27	지정	대구대학교	www.gile.or.kr
경남	`15. 01. 01	지정	경남발전연구원	www.gndamoa.or.kr
제주	`12. 07. 18	지정	제주발전연구원	www.damoa.jeju.kr

출처: 국가 평생교육진흥원(2015; 2016) 및 아주경제(2016) 수정 보완.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지원을 기반으로 시·도내 평생교육의 중추적인 기구로서 역할하도록 운영된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각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비전과 사명이 상이하고, 지역 고유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주요 추진사업은 기관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 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공통적으로 광역자치단체 내의 평생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평생교육에 대한 주기적 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 등을 통해 평생교육 정책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시민 주도의 학습과 시민참여 문화 확대를 위해 학습동아리 활동과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지역 내 평생교육기관의 기능 중첩에 따른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산재해 있는 평생교육 자원 간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도 내 평생교육 정보 중계망으로서 다모아 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⁹⁾

9)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통해 자치단체 내에 소재한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다.¹⁰⁾ 평생교육 정보를 담은 온라인 평생교육 정보망으로서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의 구축과 운영에는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각 1,000만원이 지원되며, 현재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에 있다.

<표 3-2> 시·도 평생교육 정보망 운영현황

시도	홈페이지
서울	http://sll.seoul.go.kr
부산	http://www.ble.or.kr
대구	http://tong.daegu.go.kr
인천	http://www.damoa.incheon.kr
광주	http://www.gie.kr
대전	http://daejeon.damoa.dile.or.kr
울산	http://www.uill.or.kr
세종	http://www.sejong.go.kr
경기	http://gil.gg.go.kr
강원	http://www.e-room.or.kr
충북	http://www.cblll.or.kr
충남	http://damoa.chungnam.net
전북	http://jbdamoa.jeonbuk.go.kr
전남	http://www.jndamoa.or.kr
경북	http://gbdamoa.or.kr
경남	http://www.gndamoa.or.kr
제주	http://damoa.jeju.kr

일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교육의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찾아가는 광주시민교육’이라고 하여 ‘헌신과 나눔의 시민활동가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양성된 시민활동가를 5명 이상의 광주시민들로 구성된 기관이나 모임에 파견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을 운영중이다.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교육기관까지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대전 배달강좌’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희망자들은 사설근무지나 개인교습소를 제외한 대전시 내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소외계층¹¹⁾이 교육대상이다. 전남 평생교육

현황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제공되는 정보는 등록 기관의 위치와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 주소, 전화번호 등이 있다.

10)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시·도 단위)과 평생학습도시(시·군·구 단위), 행복학습센터(읍·면·동 단위)로 평생교육 체계를 만들고 온라인에서 평생교육정보망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11)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새터민, 외곽지역 등이 포함된다.

진흥원에서 교육 취약계층¹²⁾에게 균등한 교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평생학습강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사업들은 사업 추진방식과 교육내용, 교육대상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지만, 시민들의 교육 참여와 교육 확산을 위해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급과 강사 발굴 및 배치, 지원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평생학습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도내 평생교육의 핵심기구로 역할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주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사례로 서울과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을 살펴본다.

1) 서울 평생교육진흥원

2014년 4월 서울시 부속기관으로 출범했으나, 민간 영역의 활력을 끌어들이기 위해 2015년 3월 서울시가 전액 출연한 독립 법인으로 재정비되었다. 비전은 ‘스마일’ 학습도시를 모티브로 서울평생학습의 허브를 구축하는 것이다. 평생학습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로서 평생학습 혁신 프로그램 및 학습방법론을 시범 개발·운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평생학습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민관학 수평적 거버넌스에 의한 정책사업의 공동개발 및 운영을 통해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평생학습 영역의 공공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의 일환으로 한국교육개발원과 평생교육 통계 공동 사업을 위한 MOU를 체결¹³⁾하고, 2016년부터 서울시가 추진해 온 평생교육 통계 조사 업무를 이관받았다.

주요사업으로는 민관학 교육협력망 구축 및 공동사업 실시, 평생학습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행복학습센터 운영지원,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해교육 교원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다. 이 중 협력망 구축과 관련한 사업들은 기관간 연계에 기반한 학습형 일자리 프로그램과 일자리 연계, 학습동아리의 학습역량 증진을 위한 학습모델 개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 교육훈련 지원 등 직업능력과 지역에 기반한 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사업들이 주를 이룬다. 이 외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평생교육기관 관리자 등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실무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과 문해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 연구 프로그램 확대를 목적으로 한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다.

시민교육 프로그램 관련하여 살펴보면, 서울시는 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의 역량강화와 관련한 프로그램의 추진 계획은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대부분의 타 광역자치단체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평생교육

12) 도서지역 주민, 노인(60세 이상), 장애인, 다문화 등

13) MOU를 계기로 양 기관은 서울 시민 평생학습 참여 실태 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MOU 체결은 서울 평생교육 통계 정보에 대한 일원화와 체계화된 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기관과 강좌, 강사 검색을 통해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것과는 달리, 지역 내에 위치한 기관 정보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내의 평생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서울 평생교육 통계 조사 사업을 실시함에 따라 서울시 내에 등록되어 있는 평생교육기관들의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2011년 4월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1년 7월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원하였다. 시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로 지속 가능한 대전발전을 위해 평생교육으로 행복한 대전시민을 비전으로 내걸고, 대전 평생교육의 역량강화와 연계화, 전 시민 평생교육 생활화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한 추진사업은 평생교육의 전문화·생활화·특성화·시민화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림 3-2>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추진사업



평생교육의 생활화를 위한 사업들 중 대전시민대학과 대전학 운영은 대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사업이다. 대전시민대학¹⁴⁾은 2013년 7월 개교하였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민주시민역량 교육, 직업역량 교육, 교양·여가 교육, 맞춤형 교육으로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다. 대전시민대학에서는 체계적으로 시민들의 민주시민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주시민역량

14)

http://dcu.dile.or.kr/lms/ccm/crclmList13.do?menuId=MNU_0000000000000139&searchCICode=ED_C03#dummy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대전학, 인문학, 공동체 3가지로 구분하여 프로그램들을 배치하고 있다. 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비해 민주시민역량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어 있으며, 교육 체계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러한 사업 내용들은 시민들의 민주시민 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이를 증대시키려는 모습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해당 교육 프로그램 과정들을 살펴보면, 많은 프로그램들이 교양·인문학 수준의 주제와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고, 취미·여가 활동과 관련한 내용들로 개설되어 있다. 공동체 영역 하위에 있는 지역사회 영역의 자원봉사 프로그램들로 개설된 과목들은 대부분 풍선아트, 손뜨개, 손발마사지, 천연생활용품 만들기 등의 강의들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자들 간의 소통능력 향상과 민주시민의식 향상이라는 교육목표와는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전학(지역학)은 대전시민대학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한 영역으로 제공되고 있다. 대전학(지역학) 사업은 대전 지역의 정체성과 콘텐츠를 개발·공유하여 시민의식과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추진하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 자긍심을 고취시켜 지역공동체 형성을 촉진시키고, 대전시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확립시키고자 하며,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전학을 개발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지역에 대한 이해와 지역 주민으로서의 정체성, 주민의식을 확립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측면에서 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3학기에 개설된 과목들을 살펴보면, 대전의 시민문화, 정치참여 등과 관련된 프로그램들보다는 대전의 건축·음악·역사·인물·예술·과학·민속 등의 영역 중심으로 개설되어 인문학과 지역학 강좌 중심으로 개설되어 있다. 정치, 사회, 정책 등과 관련한 사회참여 확대와 주체적 시민의식 함양, 적극적 의사개진을 돕는 주제와 내용이 담긴 프로그램은 보이지 않는다.

3. 평생학습관

구·시·군 단위에서는 평생교육을 위한 전담 실행기관으로서 평생학습관을 두고 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 시·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재정적 지원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을 진흥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기초 수준의 지방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교육감은 평생학습관을 설치 및 지정할 수 있으나,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정권한은 없고 설치·지원만을 할 수 있다. 평생학습관은 2001년 208개에서 시작하여, 2015년 383개 기관이 운영중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13; 2015). 또한 시·군·구청은 기초자치단체의 평생학습계획의 수립과 실행, 평생학습기관 간 네트워크,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정보 제공, 평생학습상담 등을 총괄

하는 전담기구의 필요성 때문에 평생학습관 또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시·군·구의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도서관, 학교, 평생교육시설, 각종 복지관, 사회체육문화시설, 기업 및 산업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지역의 평생학습 프로젝트를 실행한다(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 2014).

기초자치단체 단위인 평생학습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은 아래의 표에 제시되어 있다. 2015년 기준으로 총 프로그램은 17,174개에 달하며, 888,524명이 수강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을 6개 주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문화예술,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학력보완 순으로 개설 프로그램 수가 많았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23개로 가장 적은 개설 현황을 보였다. 학습자 규모 면에서도 문화예술, 인문교양 순으로 높았으며,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818명 수준에 그친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현황을 17개 시·도 광역자치단체별로 구분하여 살펴볼 경우, 서울 9개(323명), 경기 5개(292명), 인천 3개(26명), 대구 2개(95명) 순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관에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하나도 개설되지 않은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등을 포함하여 10개 지역으로 확인된다. 시민참여 프로그램의 개설 규모가 매우 저조할뿐만 아니라, 개설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지역이 과반수를 넘어 평생학습관에서의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보여준다.

<표 3-3> 평생학습관의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구분	계	학력보완	성인기초/ 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총 계	17,174 (858,524)	431 (16,854)	375 (17,515)	1,164 (43,565)	7,508 (344,673)	7,673 (435,099)	23 (818)
서울	4,033 (290,561)	34 (1,403)	57 (2,140)	351 (16,390)	1,729 (82,652)	1,853 (187,653)	9 (323)
부산	789 (32,377)	1 (15)	5 (108)	28 (770)	506 (24,237)	249 (7,247)	-
대구	1,089 (78,326)	-	39 (1,801)	40 (2,550)	516 (25,169)	492 (48,711)	2 (95)
인천	962 (31,687)	11 (245)	22 (2,421)	140 (4,793)	464 (13,862)	322 (10,340)	3 (26)
광주	600 (64,395)	82 (3,768)	13 (556)	41 (1,116)	168 (22,241)	296 (36,714)	-
대전	425 (21,652)	87 (2,234)	12 (315)	28 (792)	97 (11,624)	201 (6,687)	-
울산	138 (26,018)	1 (2,162)	1 (27)	9 (1,502)	81 (15,332)	46 (6,995)	-
세종	99 (2,353)	-	6 (103)	9 (233)	43 (859)	41 (1,158)	-

경기	2,315 (109,932)	154 (3,901)	106 (4,957)	178 (6,661)	790 (45,431)	1,082 (48,690)	5 (292)
강원	959 (20,507)	5 (102)	10 (183)	54 (1,337)	441 (9,616)	449 (9,269)	-
충북	348 (10,300)	-	-	18 (388)	190 (5,624)	140 (4,288)	-
충남	2,029 (67,416)	10 (1,912)	40 (3,775)	88 (2,652)	1,040 (40,718)	849 (18,319)	2 (40)
전북	541 (12,472)	1 (11)	14 (180)	25 (717)	113 (2,541)	388 (9,023)	-
전남	1,222 (35,658)	12 (268)	21 (376)	99 (2,472)	363 (8,720)	727 (23,822)	-
경북	953 (21,077)	33 (833)	19 (325)	46 (999)	535 (11,390)	319 (7,518)	1 (12)
경남	545 (24,424)	-	10 (248)	10 (193)	371 (20,156)	153 (3,797)	1 (30)
제주	127 (9,369)	-	-	-	61	66	-

주: 1개월 이상 프로그램만 해당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새로운 교육수요의 등장과 사회경제적 변화는 대학에게 평생교육과 관련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정규 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들에게도 학위 및 비학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성인들의 교육기회를 확대시키고자 하는 시대적인 요청과 법적 뒷받침으로 우리나라의 대학에서도 평생교육의 이념이 점차 확산되었다(노경란 외, 2012). 1982년에 공포된 사회교육법 제24조에 “대학·사범대학·교육대학 및 전문대학은 당해 대학의 특성에 맞는 평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둠으로써 대학평생교육은 본격화되었다(오혜연 외, 2005).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운영하는 교육기관이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종류의 평생교육기관들이 주민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만,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평생교육기관으로 조사되기도 하였다(류경숙 외, 1999). 이러한 조사결과는 대학의 평생교육에 대하여 국민의 선호도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대학이 사회적으로 높은 신뢰와 교육적 명성을 얻고 있음을 의미한다(송혜영, 2015).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2000년대 중후반까지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프로그램 유형에 있어서도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등의 비학위과정뿐만 아니라 학

력보완이 목적인 독학학위제와 학점은행제와 같은 학위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현황을 주제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된다. 2015년에 조사된 현황자료에 따르면, 28,000개에 달하는 프로그램들이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대학이 가장 크고, 전문대학, 대학원대학, 교육대학 순으로 나타났다. 6대 영역별 프로그램의 수는 학력보완, 문화예술,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순으로 많았으며,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성인기초/문자독해 프로그램과 비슷한 수준의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학력보완, 문화예술,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프로그램이 다양한 대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시민참여 프로그램은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대학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규모와 교육기회 제공의 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사회경제적 변화와 사회교육법 공포에 따라 양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으나, 그 프로그램의 운영에 있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제공보다는 특정 영역의 프로그램들 중심으로 운영되는 편중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4>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주제구분별 프로그램 및 학습자 현황

구분	프로그램수 (학습자수)						
	총계	학력보완	성인기초/ 문자해독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총계	28,066 (824,011)	14,842 (417,281)	14 (988)	4,370 (120,692)	2,815 (81,577)	6,007 (201,872)	18 (1,601)
전문대학	4,601 (138,857)	1,650 (43,126)	7 (655)	1,227 (36,927)	524 (18,759)	1,189 (38,669)	4 (721)
교육대학	488 (14,822)	78 (3,872)	1 (21)	128 (3,111)	79 (2,058)	201 (5,656)	1 (104)
대학	21,933 (631,318)	12,651 (343,615)	6 (312)	2,818 (75,029)	1,907 (55,753)	4,538 (155,833)	13 (776)
방송통신 대학	4 (673)	-	-	2 (556)	2 (117)	-	-
산업대학	6 (268)	-	-	2 (85)	2 (148)	2 (35)	-
기술대학	-	-	-	-	-	-	-
각종학교	-	-	-	-	-	-	-
원격 및 사이버대학	286 (22,571)	84 (18,773)	-	83 (1,779)	105 (1,410)	14 (609)	-
사내대학	-	-	-	-	-	-	-

기능대학	49 (2,073)	2 (34)	-	26 (1,408)	8 (220)	13 (609)	-
대학원대 학	573 (10,868)	270 (5,640)	-	72 (1,558)	186 (3,107)	44 (563)	-
전공대학	126 (2,561)	107 (2,221)	-	12 (239)	1 (5)	6 (96)	-

주: 1개월 이상 되는 프로그램만 포함.

출처: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국가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국립학교에 초점을 두어 국립대학 부설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원의 현황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라 총 26개의 대학과 10개의 교육대학, 1개의 전문대학으로 구분된다.¹⁵⁾

<표 3-5>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 현황

일반대학	부산대, 경북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강원대, 경상대, 제주대, 강릉원주대, 공주대, 금오공과대, 목포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순천대, 안동대, 창원대, 한국해양대, 경남과학기술대, 군산대, 서울과기대, 한경대, 한국교통대, 한국체육대, 한밭대
교육대학	서울교대, 부산교대, 경인교대, 광주교대, 대구교대, 청주교대, 공주교대, 전주교대, 진주교대, 춘천교대
전문대학	한국복지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법학 교육기관으로 출발한 서울대¹⁶⁾는 현재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형 조직으로 전환되어 운영되고 있다. 서울대는 2011년 12월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이에 따라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일반대학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국립대학으로 오랜기간 운영되었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 독립법인으로 전환되었다는 점,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명칭을 대학명에 포함하여 사용함에 따라 서울대학교를 국립대학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여전히 높다는 점,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가입하여 경기권의 거점대학으로 역할한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립대학들과 같이 서울대 부설 평생교육원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립대학 중 지방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에 가입된 10개의 종합대학은 지방의

15) 국립학교 설치령 (시행 2016.06.28.)

16) 1895년 4월 19일 고종의 칙령에 의해 최초의 근대 법학 교육기관으로 세워진 '법관양성소'에서 출발하였다.

대표적인 국립대학교이다. 지방거점국립대는 도(道) 단위의 광역행정구역마다 한 개 또는 두 개의 대학이 설정되어 있으며, 서울대, 부산대, 강원대, 충북대, 충남대, 전북대, 전남대, 경북대, 경상대, 제주대가 포함된다. 이들 대학교는 대학교육의 질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지방권역별 교육의 평등을 위해 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 따라서 국립학교들 중에서도 이들 지방거점국립대는 다양하고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의무와 상대적으로 많은 자원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는 부설 평생교육원의 운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아래의 표는 서울대를 포함하여 국립대학의 부설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 현황을 보여준다.

<표 3-6> 국립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구분	과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서울대 평생교육원	전문과정, 교양과정, 기획과정, 열린강좌	0
부산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기획과정, 특별과정, 노동부국비지원과정, 경현실버아카데미(노인대학)	X
경북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양과정, 민간자격과정, 예술과정, 특별과정, 학점은행제과정, 관학연계과정	X
충북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전문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위탁교육과정, 교원직무연수	X
충남대 평생교육원	생활교양과정, 전문자격과정, 특별교육과정, 학점은행제과정, 위탁교육과정	X
전북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민간자격증, 학점은행제과정, 특별과정	X
전남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자격증과정, 학점은행제과정, 위탁교육과정	X
강원대 평생교육원	교육과정(전문교육과정, 교양교육과정, 특별교육 및 위탁교육, 교원연수과정 포함), 비학위과정.	X
경상대 평생교육원	자격과정, 전문교육과정, 일반교육과정, 통영과정, 하동군위탁, 학점은행제과정	X
제주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양과정, 한국어양성과정, 여성대학 여성지도자과정, 유학대학 유학지도자과정, 시민경제대학과정	X
강릉원주대 평생교육원	전문과정, 교양과정, 특별과정 그리고 자격증 취득종목	X

공주대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학점은행제과정, 지자체협력과정	X
금오공과대 평생교육원	사회교육대학, 학점은행제	X
목포대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특별과정, 학점은행제, 자격증취득과정	X
목포해양대 평생교육원	영역별로 프로그램을 구분하지 않고 강좌 운영. 지도사, 체육과 악기연주 강좌와 생활교양 프로그램 위주	X
부경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협동교육과정, 고용보험지원교육과정, 특별교육과정, 기장군민대학, 학점은행제과정	X
순천대 평생교육원	평생교육과정, 학점은행제과정, 평생학습계좌제	X
안동대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자격증과정, 특별교육과정	X
창원대 평생교육원	창원대학교특별과정, 창원시위탁교육과정	X
한국해양대 평생교육원	해양특성화교육, 일반교양 및 전문교육, 외국어교육	X
경남과기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전문&자격과정, 특별교육과정, 위탁교육과정(하동군위탁)	X
군산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학점은행제과정, 민간자격증 취득과정	X
서울과기대 평생교육원	일반교육과정, 학점은행제과정	X
한경대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과정(비학위과정), 학점은행제과정, 평생학습중심대학	X
한국교통대 평생교육원	특별교육과정, 부동산교육과정, 전문자격증과정 및 일반교육, 학점은행제과정	X
한국체육대 평생교육원	생활체육프로그램, 재학생특기프로그램, 일반교육과정(100세 건강대학), 특별(위탁)교육과정	X
한밭대 평생교육원	교양과정, 민간자격과정, 특별과정	X

주: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국립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프로그램 분류에 따라 부르는 명칭은 조금씩 다르지만 크게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으로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점인정과정을 제외한 비학위과정에는 전문교육으로 볼 수 있는 자격증과정, 시민들의 교양 함양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국가기관 및 지자체, 기업 등과

연계한 위탁교육 또는 협력과정, 지역대학과정 등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의 분류는 평생교육원마다 차이가 있을지라도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게 구성되어 있다.

학위과정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청소년지도사, 평생교육사 등이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학 평생교육원마다 개설되는 학위과정과 규모는 차이가 있지만, 학위과정은 거의 비슷하며, 일부에서 경영학이나 체육학 등의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비학위과정 중 자격증과정에는 상담 및 명상지도사, 레크리에이션전문강사, 커피바리스타, 미술심리상담사, 동화구연지도사, 유아영어지도사, 필라테스지도사, 한국어강사 등의 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일반교양과정에는 스피치, 웃음코칭, 리더십, 부동산투자 등 생활 및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 수채화, 서예, 기타, 바이올린 등의 미술 및 음악 프로그램과 인문학, 철학 프로그램 등이 주로 이룬다. 일반교양과정 프로그램은 다른 과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다. 그렇지만 기관마다 큰 차이나 특색 없이 비슷한 내용과 수준으로 개설되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 대학과 지역의 특성에 따라 소수의 위탁교육 또는 협력과정, 지역대학과정이 개설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과정은 필요에 의해 특정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으며,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위에서처럼 국립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학교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를 제외하고 시민참여교육,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립대학은 한 곳도 확인되지 않는다. 공주대 평생교육원의 경우, 2014년 상반기에 특별기획과정으로 법무부(KIIP) 사회통합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수업은 수강료 전액 무료의 특별과정으로, 국내 체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설 초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는 ‘사회통합교육: 한국어기초, 한국사회이해’라는 과목명으로 개설되어 이민자의 사회적응 및 정착 지원, 사회통합과 다문화이해 증진을 도모하고자 실시되었다. 그러나 2015년 하반기부터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으로 과목명을 변경하고, 한국어교실로 운영하고 있다. 현재에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한 한국어 능력 증진에 목표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

또한 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달리, 순천대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중 일부 과정을 시민참여 교육과정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참여 강좌로 분류된 해당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타 평생교육기관에서 일반교양, 어학과정으로 분류하는 프로그램과 크게 다르지 않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민주 시민교육에서 의미하는 시민참여교육으로 보기는 어렵다.¹⁷⁾ 이러한 공주대와 순천대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들을 포함하여 국립일반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민교육 프로그램은 교양과정 중에 청소

17) 2016년 1학기에 개설된 시민참여 교육과정은 기초생활영어, 지리산권 근현대사의 역사와 문화, 컴퓨터기초, 하모니카, 한글2010과과워포인트, 한문교실이다.

년방학과정과 시민교양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방학과정은 청소년들이 서울대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의 다양한 학문 분과를 미리 경험해봄으로써 경험과 진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운영되고 있다. 강의대상은 중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생들이며, 대부분의 강의는 방학기간동안 이루어진다. 청소년방학과정 프로그램들 중에 ‘세계화 시대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강좌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해당된다. 청소년들이 세계화의 특징과 사회 정의 개념에 대한 이해, 글로벌 이슈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차시가 구성되고, 이를 통해 청소년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은 4-5개 차시로 구성되며, 일주일 동안 매일 수업이 이루어지고, 수강료 12만원 을 납부해야 한다. 2014년 겨울방학부터 현재까지 매 방학마다 개설되고 있다.

<표 3-7> 세계화 시대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강좌의 강의계획서

차시	일시	강의 주제	강의 내용
1	8/1	세계화와 글로벌 이슈	통계자료를 통하여 200개 국가들이 200여년 동안 변화하는 모습을 고찰함으로써 세계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와 함께 야기되는 글로벌 이슈의 본질에 대하여 살펴본다.
2	8/2	사회 정의 개념	사회 정의에 대한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접근법에 대하여 살펴본다. 롤즈의 정의론과 비판이론가들의 사회정의론이 가지는 차이점을 중심으로 이성중심의 정의론과 현실사회중심의 사회정의론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고찰한다.
3	8/3	글로벌 이슈와 윤리적 사고	국가 내에서의 다양성 증가는 다문화 현상을 가져오고 전 세계에서의 다양성 증가는 세계화 현상을 가져온다. 다문화와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글로벌 이슈들이 윤리적 문제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본다.
4	8/4	글로벌 이슈와 사례 분석 1: 인종차별, 여성차별 등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들 중에서 인종차별과 여성차별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의 문제를 다룬다. 미국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인종차별과 여성차별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과의 관련성을 찾는다.
5	8/5	글로벌 이슈 사례 분석 2: 환경 문제 등	세계화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문제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관점에서 다룬다. 환경 문제와 관련된 국제 협약을 살펴본다. 또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청소년들이 실천가능한 방안을 모색한다.

출처: 서울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청소년방학과정 프로그램들 중에 또 다른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으로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정치학’ 수업이 있다. 이 수업은 국가 간의 비교에 필요한 개

념, 중요 쟁점들 이론들을 배우고, 서로 다른 정치시스템 간의 정치제도, 과정, 정책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들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정치체제와 정치문화 및 제도를 둘러싼 국제적 요소들을 학습하여 세계화된 민주국가의 시민적 자질 습득을 목표로 삼고 있다. 프로그램은 총 5개 차시로 구성되며, 일주일 동안 매일 수업이 이루어진다. 2015년 여름방학에 개설되었으며, 2016년도 현재는 개설되지 않고 있다.

<표 3-8> 중·고등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정치학 강좌의 강의계획서

차시	일시	강의 주제	강의 내용
1	7/27	정치란 무엇인가? 우리는 왜 국가(정부)가 필요한가?	우리는 정치라는 말을 거의 매일 쓰고 살지만 실제로 정치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가 어렵다. 첫날은 정치는 도대체 무엇이며 도대체 개인,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논의한다. 그 후에 우리가 왜 정부라는, 우리를 강제할 수 있는 집단을 만들어 놓고, 그 결정에 복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에 정부가 없을 때보다도 더 문제가 될 수 있는가, 즉 정부의 역기능에 대해서 토론한다.
2	7/28	민주주의는 정말 좋은 제도인가? 정치문화란 무엇인가?	두 번째 날은, 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민주주의의 하에서 살고 싶어하는지 그 이유를 짚어본다.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정치체제 중 가장 좋은 정치체제인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본다. 또한 이 날은 한 사회의 정치문화란 무엇이며, 이것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한 사회의 정치문화가 합리적인가 아니면 갈등적인가에 따라 시민들의 삶이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논의한다.
3	7/29	정치제도의 다양한 모습들 I. 선거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선택이 어떤 선거결과를 낳는가를 정하는 룰이다. 셋째날은 소선거구, 단순과반수제, 비례대표제, 또 이 두 가지를 혼용하는 제도 등을 채택하는 국가들의 예를 살펴가면서, 이들 선거제도가 처음에 선택된 이유와 선거의 결과가 어떤 그룹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낳는가에 대해 토론할 것이다. 또한 정당제도로 넘어가서, 경쟁적 정당제도와 권위적 정당제도의 차이점을 공부한다. 경쟁적 정당제도는 정당의 수에 따라 양당제, 다당제로, 정당들 사이의 관계에 따라 합법제와 갈등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각 국가의 정당제도를 결정짓는 요인과 각 정당제도의 효율성을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정당에 대해서도 평가 및 토론을 할 것이다.
4	7/30	정치제도의 다양한 모습들 II. 어떤 제도가 좋은 제도인가?	정치체제 내에서 권력이 나누어지는 방법은 세 가지 잣대를 가지고 비교해 볼 수 있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권력의 지리적 배분(중앙집권제, 연방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정부 내 각 기관 사이의 권력의 배분(예를 들어, 대통령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이다. 셋째는 정부자체의 권력남용을 방지하는 감시기능을 가진 기관의 유무 등이다(사법부의 독립성 등). 우리는 세계 각 국가의 정치제도의 차이를 비교하고, 어제 공부한 선거제도, 정당제도와 다시 반문하여, 가장 바람직한 정치제도라는 것이 존재하는지, 혹은 한 국 상황에 가장 맞는 제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5	7/31	정책과 개인의 관계. 추출, 분배, 규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른 형태의 정부가 들어올 때, 혹은 다른 정당이 집권 할 때, 그들의 정책결정이 나라의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 권력의 정책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이 살아오고 있다. 이에 마지막 날에는 국가의 대표적인 정책 기능인 추출, 분배, 규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각기 다른 형태의 정당이 집권할 경우 나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토론한다. 또한 세계적인 추세를 추적해보고, 우리나라의 정책의 흐름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평가를 내려 본다.
---	------	---------------------------	--

출처: 서울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청소년방학과정 외에 시민교양과정에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세월호 이후의 민주주의-민주주의 다시 배우기’ 강좌는 세월호 사건과 그 이후에 지속되는 정치권의 일들로 인해 제기된 민주주의 운영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그 작동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토론하고자 개설되었다. 수강생들이 가능한 중립적 시각에서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토론에 참여하며, 자연과학과 다른 사회과학에서의 답안 모색을 같이 배워갈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성인을 대상으로 약 8주 동안 8개의 차시로 구성되며, 수강료 16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2015년 가을학기에 개설되었으며, 2016년 현재는 개설되지 않고 있다.

<표 3-9> 세월호 이후의 민주주의-민주주의 다시 배우기 강좌의 강의계획서

차시	일자	강의 주제	강의 내용	교수명
1	9/1	한국의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첫 강의에서는 시민들의 민주주의라는 개념 자체에 대한 이해의 부족, 또 지도자가 되는 과정의 비정상성 등을 돌아보며, 정치교육의 당위성을 돌아본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법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법대로 사는 것과 관행대로 사는 삶을 비교하여, 변화의 당위성을 지적한다.	김희민
2	9/8	정치문화 -조화로운 사회, 못 믿는 사회	2강에서는 “정치문화”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갈등적 정치문화와 시민사이의 불신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에 대한 역사적 예를 제시한다. 현재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당제도를 진단하고 양극화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김희민
3	9/15	종교와 민주주의	사회과학이 발달하고 그로 말미암아 문화가 전반적으로 세속화되었기 때문에 그 세력은 많이 약화되었으나 종교는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남아 있다.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개발한 정치제도 가운데는 가장 우수한 것이고 그 사실은 인류의 절대다수가 인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가 민주주의를 이상으로 추구하고 있다. 문화 세속화로 종교인보다 민주주의 신봉자가 더 많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임 정	손봉호(사회교육과 명예교수)

			도도 경우에 따라서는 종교에 대한 것보다 더 크다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민주주의와 종교의 관계는 두 신념간의 관계라 할 수도 있다. 위의 전제하에서 이번 주 강의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다룬다: 1. 종교와 민주주의는 상호배타적인가?; 2. 개신교와 민주주의; 3. 종교의 민주화; 4. 종교의 민주주의 보완.	
4	9/22	민주사회와 윤리	민주사회가 효율적이고 인간적으로 운영되려면 법과 제도에 의한 강제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시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적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윤리는 자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고, 모든 윤리는 궁극적으로 정의로 환원된다. 한국의 민주주의는 시민윤리의 부족으로 시련을 겪고 있는데 합리적 이기주의와 지도층의 자존심에 호소함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다.	손봉호
5	10/6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 I.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시민들의 유형을 살펴보고, 바람직한 시민의식을 토론한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시민이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 즉 민주주의의 정의와 헌법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김희민
6	10/13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시민의 모습 II.	전주의 강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민의 의식을 살펴본 후, 이번 주에는 한 단계 위의 덕목, 즉 민주국가에서 시민들이 자기의 이익 추구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즉 자기의 이해와 민주주의 원리를 동시에 이해하고 있는 시민의 자질(informed citizens)에 대하여 토론한다.	김희민
7	10/20	민주사회에서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는 동기를 살펴보고, 지도자가 추구하는 것들과 시민 전체의 이해가 일치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장치와 시민의 의식을 살펴본다. 그리고 민주국가에서 지도자가 가져야 할 덕목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 즉 민주주의의 정의와 헌법적 측면에서 살펴본다.	김희민
8	10/27	총정리	마지막 강의에서는, 그 전의 모든 강의를 종합하여, 첫 강의에서 던졌던 명제, 즉 법대로, 공부하는 시민과 지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서 과정을 끝낸다.	김희민

출처: 서울대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은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세계화 시대 사회 정의란 무엇인가’ 하나뿐이다. 2015년과 비교하면 3개에서 1개 프로그램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일반 성인이 아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학과정만 개설되어 있다는 점은 서울대 평생교육원에서도 제한된 내용과 교육대상에 국한된 프로그램만이 제공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황들을 종합하면, 서울대를 포함한 국립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일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은 제공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립일반대학 외에 국립교육대학 부설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은 국립일반대학의 평생교육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¹⁸⁾ 자세한 프로그램 현황은 아래의 표에 정리되어 있다. 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원양성 대학이라는 특성상,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도 교원들의 교육 실천방법 취득과 교육자로서의 자질과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학교에서 필요한 인력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는데, 초등돌봄전담사, 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직무연수, 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교육과정 등 전문가과정 또는 특별·위탁과정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제외하면 다른 교육프로그램들은 일반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내용으로 개설되어 있다. 초등교원 양성에 중점을 두는 교육대학의 부설로 운영되다 보니, 일부 교육대학의 평생교육원은 소수의 강좌만을 개설하여 그 규모가 소규모인 경우도 있다.

<표 3-10> 국립교육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교육과정 및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현황

구분	과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서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유·초등 아동지도, 인문교양, 생활교양, 문화예술, 건강·생활스포츠, 상담사과정, 전문가과정(초등돌봄전담사), 특별과정, 온라인과정, 서초구청 평생교육 프로그램	X
부산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인문학·일반교양, 전문교육강좌, 음악·생활·체육, 미술·공예·실과, 특별·위탁과정(방과후학교 외부강사 직무연수, 지도사, 상담사 등), 자격취득과정	X
경인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경기 평생교육원: 일반과정, 자격과정, 특별과정 인천 평생교육원: 외국어과정, 예술·교양과정, 자격과정, 특별과정	O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문교육과정, 직업능력향상, 직무연수, 자격취득, 문화예술, 인문사회	X
대구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양과정, 예체능과정, 자격증과정, 특별교육과정(학교안전지도사, 학교폭력예방상담사)	X
청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특별한 구분 없이 운영	X

18) 한국복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은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외한다.

공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시민교양강좌, 한국어강좌	X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예능교양, 일반교양, 자격증과정	X
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어학과정, 인문교양, 생활·음악·미술 교양, 건강-스 포츠교양, 자격과정, 하동군위탁과정	X
춘천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문화교양, 지도자양성, 외국어교육, 음악교육, 스포 츠강좌 과정	X

10개의 국립교육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중에 경인교대 인천 평생교육원 1곳만이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경인교대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예술·교양과정에 개설된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인성교육’ 과정이다. 인간의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인간의 행동규범과 가치관 정립에 주요인이 되는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계발하여 긍정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고, 변화된 행동양식과 새로운 가치관,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 과목의 세부 내용은 수강생들에게 소통의 필요성, 경청의 기술, 정체성 훈련, 협동의 의미 등을 생각해보고, 행동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표 3-11> 경인교대 부설 인천 평생교육원의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인성교육 과정

학기	2016년도 - 3학기	영역	
강좌명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인성교육	수업시수	24
교육대상	일반성인	모집정원	20
접수기간	2016.08.01 ~ 2016.08.31	선발방법	선착순 마감(수강신청 후 학습비납부까지 완료한 자)
교육기간	2016.09.01 ~ 2016.11.23	수업시간	화요일
교육장소	추후공지	수강료	120,000
이수기준	출석률 80%		
강사명	김정자(인하대학교학원졸. 전 인천교원연수원 원장. 코치협회 전국 강사. 진로학회 부회장)		
강좌소개	인간의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인간의 행동규범과 가치관 정립에 주요인이 되는 감성과 이성을 동시에 계발하여 긍정적인 의식을 고양 시키고, 변화된 행동양식과 새로운 가치관, 긍정적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바람직한 사회인으로 성장시키는 교육이다.		
강의교재	〈함께 가요. 행복한 미래〉 / 김 정 자 / 인천인성교육센터		

1주차	인성교육 필요성. 목표. 가치 국가 인성교육 진흥법
2주차	<함께 가요>프로그램
3주차	인간의 본질과 회복 <행복한 미래> 프로그램
4주차	효의근본. 효행실천. 은혜와 감사. 만남의 축복
5주차	소통의 필요성. 마음 열기. 공감하기. 경청의 기술
6주차	책임의 개념. 정의. 종류 책임의 행위와 사랑
7주차	배려와 행복. 사회와 배려 나는 누구인가-정체성훈련
8주차	협동-의미. 두레. 상호성 칭찬과 격려 인정 축하.
9주차	이해와 분별력 실천의 힘. 행동 변화.
10주차	존중과 예절. 성품과 인격. 감사의 내면화.기능과효과
11주차	정직과 약속. 양심과 보상 용기와 결심. 결단. 선과악
12주차	발표회 및 수료식

출처: 경인교대 평생교육원 인천캠퍼스 홈페이지.

5.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orea Association for Community Education, KACE)는 1969년에 한국지역사회학교후원회라는 이름으로 창립된 비영리 민간단체이다. 창립 이후 학교를 주민의 평생교육의 장으로 개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성장을 돕고 지역주민은 학교의 협력자가 되게 함으로써 자기 지역과 학교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학교중심의 교육공동체운동인 지역사회교육운동을 전개하고 있다.¹⁹⁾ 건강한 시민공동체 형성에 중점을 두고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개념을 보급하는 이념교육과 실질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학교에서 필요한 인력 배출 중심의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국가가 본격적으로 평생교육의 제도화나 지원을 이루기 전부터 시민사회영역에서 지역주민의 다양한 학습요구를 해소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활동을 펼쳐온 평생교육의 제공자로 역할하고 있다(한승희, 2004).

1989년 한국지역사회교육후원회로 개칭되었다가, 1997년 현재의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로 개칭되었다. 2016년 현재 전국에 중앙을 제외한 30개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다.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운동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방조직 구축에 힘써온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2000년대 들어서 지자체, 외부기관과의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강동교육청 지정 평생교육원을 등록하여 운영

19) 권두승(2002: 245-247)은 지역사회교육운동이 지역의 학교를 중심으로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가 연대하여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역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참여주의적 정치 민주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하고, 중점 사업별 센터를 설치하여 조직과 사업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그림 3-3>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중앙협의회 조직도



출처: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홈페이지.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지역사회교육운동을 통해 건강한 가정, 즐거운 학교, 활기찬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습하며 봉사하는 시민문화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사회 구현을 사명으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지역사회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학습하고 봉사하는 시민문화 형성을 기관의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크게 부모리더십센터, 인문교육원, 차세대리더십센터, 시민리더십센터, 학교안전센터, KACE 도서관친구, 평생교육원, 원격평생교육원, 아버지다움 연구소로 구분된다. 이러한 사업 구분은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한 것이며, 실질적인 교육은 평생교육원을 통해 이루어진다. 즉, 평생교육원은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며, 그 안에서 센터로 구분되어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각 사업에서는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의 연구개발과 교재 제작 및 자료 보급이 진행되며, 기관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을 기획·제안·보고하는 기관협력사업과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을 수탁받아 운영을 돕는 대외협력사업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프로그램들은 수강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

양하고 사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시민교육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학교안전센터나 학교도서관 가꾸기, 지도자과정, 글로벌 매너코칭 등의 교육을 제외하고, 시민교육과 가장 관련성이 높은 교육은 리더십센터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들이다.

차세대리더십센터의 경우, 프로그램 지도사 양성 과정을 제외한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을 들 수 있다. 프로그램은 영역별로 리더십, 대화, 학습, 성·양성평등, 학교폭력예방, 경제, 미디어 등으로 구분된다. 예로, 리더십 영역에는 자기표현훈련, 지피지기교실, 차세대 시민학교, 차세대 리더십학교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자기표현훈련 프로그램에서는 대인커뮤니케이션기법을 훈련하고 실습하며, 지피지기 교실에서는 대화패턴과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적 방법 습득을 통해 나 자신과 친구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차세대 시민학교는 폭력, 학교, 차이 등 다양한 주제로 재미있는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존중하고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차세대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리더십을 키우는 과정이다. 차세대 리더십학교는 자신의 감정을 발견하고 표현하며 긍정적이 자아를 키우고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과정에서 대인관계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감성리더십, 공감에 대해 배우고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통합적 사고능력, 차세대리더십 함양, 원만한 인간관계훈련 등을 가능하게 하여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는다.

<표 3-12> 차세대 시민리더십 교육

분야	주제	분야	주제
시민리더십 이해	시민리더십이란?	대화법	너와 나, 잘 通하는 친구
시민의식	세상을 바꾸는 시민리더	진로	미래 직업 찾기
다문화 이해	함께사는 세상, 多多익선	주인의식	차세대 민주시민
역사의식	우리역사 바로알기	환경	Green! 녹색지구 만들기
학교폭력 예방	행복을 나누는 교실	세계시민의식	매너로 성장하는 차세대 신사·숙녀
저출산 극복	인구 올리GO, 국민행복 올리GO!	나눔	존중과 배려의 봉사 리더십

시민리더십센터에서는 ‘시민리더십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과 ‘시민리더십 존중이 피어나다’, ‘글로벌 시민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시민리더십 지도자 양성’은 주민되기, 바른 역사관 갖기, 소통하기, 도덕성 갖기, 세계시민되기 프로그램 진행과 정치, 경제, 사회, 통일, 국제관계 등의 배경지식을 획득하도록 돕는다. ‘시민리더십 존중이 피어나다’ 프로그램은 자긍심과 자존감을 갖춘 주인되기, 절제와 배

려의 시민되기, 공동체와 시민리더십 등의 주제로 운영되고, ‘글로벌 시민학교’는 소통능력 함양과 지역문제에 대한 관심을 지니고 세계시민의식을 키울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짧게는 4시간으로 구성되고, 대부분 무료로 진행된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특성상, 홍보와 수강생 모집에 한계가 존재한다. 수강료를 책정할 경우, 수강생이 줄어들거나 심하면 강의 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때문에 프로그램은 자체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외부 기관이나 지자체 등의 사업비 보조를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다. 프로그램 구성과 개발은 기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사업 발주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재조합 하는 등 개설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에 맞게 유동적으로 이루어진다.

<표 3-13> 시민리더십지도자 양성과정

분야	주제
총론	시민리더십, 존중이 피어나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
역사의식	자랑스러운 우리역사 대한민국 탄생과 성장: 현대사 쟁점 재해석
주인의식	너와 나 소중한 나라의 주인 참여하는 시민리더십
도덕의식	절제와 배려의 시민리더십 공동체 성장을 향한 시민리더십
노동	21세기 노동윤리와 신 노사관계 인문학을 통해 보는 일하는 삶의 재발견
정치	포퓰리즘 극복과 민주주의 시민참여로 변화하는 대한민국
환경	녹색성장과 환경실천
경제	경제개발과 인적자본
통일	국제정세, 북한의 동향을 통해 알아본 통일
세계시민의식	소통하는 시민리더십 세계화 시대의 시민리더십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2012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식인가를 받고 2013년부터 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학점은행제과정으로 아동학, 사회복지학 학위취득 과정과 보육교사 2급 자격증과정,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정을 두고 있다. 수익사

업을 위해 운영하다보니 자격증 취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비학위과정은 개설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원격교육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되는 오프라인 형태의 시민교육 프로그램들에 온라인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기관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그룹별 토론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고 체험과 참여 형태가 많은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온라인 형태로의 전환보다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수업을 병행하는 형태로 변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²⁰⁾

6. 광역자치단체 서울시 사례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기관 외에도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주제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오고, 최근 국가 단위 수준을 넘어서 시·도 수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확산방안을 도모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이다. 이 중에 서울시는 인터넷에 기반한 정보접근성과 토론의 장 증대로 인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의사개진이 가능해지고, 사회참여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2014년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2015년 5월부터 시행해오고 있다. 서울시의 조례 제정은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도 시민들의 올바른 시민의식과 책임의식 함양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민주시민교육 실시를 위해 서울시 본청의 평생교육정책관 밑에 평생교육담당관을 두고,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평생교육담당관의 업무에는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의 운영 및 관리,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및 지도감독, 민주시민교육 정보공유 아카이브 구축, 민주시민교육 공모, 시범, 조사·연구사업 추진, 서울시민대학 운영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평생교육담당관의 업무를 살펴본다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에 대해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는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관의 평생교육 사업들 중에 서울시 시민교육 공모사업, 자율적 사회참여모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서울시민대학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서울시 시민교육 공모사업

서울시는 제정된 조례를 기반으로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활성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발굴 및 참여와 보급을 지원하고자 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공모사업은 일상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배려

20) 2016년 8월 5일에 진행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관계자와의 인터뷰에서 확인하였다.

층의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지원하며,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생활민주주의 실태조사 및 지속가능한 콘텐츠 개발을 병행하고, 선정단체들의 역량강화를 통한 양질의 프로그램 운영기회 제공과 사업효과성의 제고를 추진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2015년 조례 제정 후 처음으로 시민학습 공모사업이 실시된 이후에 지난 2016년 6월 두 번째 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공고되어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공모사업 첫 해에는 총14개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1,838명이 참여하였고, 6,000만원이 사업운영비로 지원되었다. 2016년에는 일반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실태조사 프로그램, 콘텐츠개발 프로그램 총 4개 분야에서 40개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총 3억 원의 사업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표 3-14> 2016년 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 내용

분야	수량 (개)	내 용
일반 프로그램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이 직접 실천하는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프로그램 - 민주주의 기본원리, 정치체도의 이해, 사회 참여 등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특화 프로그램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배려계층 「권리찾기」 프로그램 -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배려계층의 사회참여강화 프로그램 발굴 - 소통·치유 교육, 인권교육, 권리실현을 위한 사회참여 교육 등
실태조사 프로그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현장 실태조사 및 학습 활동 조직화 연구 등 - 시민 인식정도, 수요도, 시민사회 추진현황 등에 대한 자료 수집 - 광범위한 전수조사보다는 기 연구 자료를 분석·활용 - 분산된 개별연구를 조직화하여 정책 활용에 필요한 유의미한 결과 도출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사회 현장에서 필요한 콘텐츠 개발(※ 아래 예시(안) 참고)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가이드 북(서울시 정책 및 각종 제도 소개 등) - 학령기, 성인 등 연령별 교육 콘텐츠 개발(시청각 자료 등) - 통반장, 주민자치위원, 자치구 담당자 등 분야별 활동 가이드 북 개발

또한 서울시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2014년 4월 「서울특별시 평화·통일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2015년 4월 시행 이후 지난 2016년 6월 평화·

통일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 및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위 조례 제6조21)에 따라 평화·통일 시민교육 공모사업을 공고하였다. 평화통일 교육이란 남북한 화해와 평화 공존, 자주·평화·민주의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의 통일을 이루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의미한다. 사업 공모분야는 평화·통일 교육 기획전문가, 전문강사, 진행자 등의 전문가 양성교육, 북한문화 이해 과정, 현장 체험식 교육, 기타 주민참여형 등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분야이며, 사업별 최대 2,000만원, 전체 5개 사업 내외로 지원하며, 총 1억 원의 사업운영비를 지원한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교육 공모사업은 서울시가 지원주체로서 역할하고, 시민단체, 사회적기업 등이 실행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해당 조례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만 제시하며, 민간단체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아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사업을 제안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공을 계획하고 있다.

2) 자율적 사회참여모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시민교육 공모사업과 함께 시민들의 자율적인 사회참여모임을 발굴하고 지원하고자 자율적 사회참여모임(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원사업은 단체연계형 동아리와 시민자율형 동아리로 구분하여 이루어진다. 단체연계형 동아리 지원사업은 전문단체를 통한 우수동아리의 인큐베이팅을 사업추진목적으로 지니며,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16년 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단체를 발굴·육성·코디네이팅하는 동아리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반면 시민자율형 동아리 지원사업은 서울시민들이 지역사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모임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된다. 지원대상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등록되어 있고, 자발적·정기적으로 운영되는 5인 이상의 서울시민으로 구성된 개별 동아리다. 단체연계형 동아리 지원사업은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16년 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단체를 통해 서울시가 동아리를 지원하는 형태이며, 시민자율형 동아리 지원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개별 동아리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형태이다. 총 70-80개 내외의 동아리를 선정하여, 동아리 1개당 활동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21) 제6조(평화·통일 교육의 위탁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평화·통일 교육의 일부를 자치구에 위임하거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화·통일 교육을 위임받은 자치구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재원은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할 수 있다.

<표 3-15> 2016년 자율적 사회참여모임 활성화 지원사업 내용

사업명	유형①(단체연계형 동아리)	유형②(시민자율형 동아리)
사업목적	전문단체를 통한 우수동아리 인큐베이팅	지역사회 자율적 사회참여모임 지원
지원대상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16년 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단체 발굴·육성·코디네이팅하는 동아리	평생학습포털내 등록된 서울시민으로 구성된 동아리
신청자격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2016년 시민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 운영단체	개별 동아리
신청규모	운영단체 당 2~3개 이내 사업	동아리 당 1개 사업
추진방법	시민학습 프로그램 운영단체 대상 공모를 통해 동아리 모임 선정 및 지원	시민대상 공모를 통해 동아리 모임 선정 및 지원
보조금교부	서울시→동아리 운영단체→개별 동아리	서울시→개별 동아리
사업관리	동아리 운영단체	개별 동아리

3)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공모사업과 지원사업 이외에도 서울시는 다양한 평생교육관련 정보의 통합 및 사이버학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포털을 개설하였다. 포털은 서울시, 자치구, 공공시설의 평생교육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학습, 서울시민대학, 강사등록을 통한 재능기부활동, 기관강좌정보 등을 제공한다. 온라인학습은 인문학, 취업/자격증, 외국어, 가족/건강, 취미/교양, 정보화 등의 프로그램을 온라인상에서 수강하여 교육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시 내에 등록된 기관들은 분야별·지역별로 검색이 가능하며, 평생학습 네트워크(기관현황)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기관강좌정보는 서울시 데이터센터에서 취합되어 보여지는 정보만을 제공하며, 해당 강좌의 세부 정보는 각 기관별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들 간의 지식공유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강사재능기부와 학습모임(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온라인 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강사재능기부의 경우, 강사로서의 역량을 지닌 시민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 강의분야와 정보를 입력하고, 강의내용을 준비하여 등록한 뒤,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강의를 개설하고 학습공유를 할 수 있다. 또한 커뮤니티를 희망하는 시민은 학습모임을 개설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학습모임을 통해 작품을 뽑내거나 프로그램에 의견을 제안할 수 있다.

4) 서울시민대학

이 외에도 서울시는 서울시민대학을 개설하여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을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학습의 기회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서울시민대학 사업은 2013년부터 추진되었으며, 2016년에는 시민청, 독섬·은평·중랑 학습장, 연계대학 내 강의실에서 강의가 이루어지면서, 도시 곳곳이 배움의 터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다. 서울시민대학의 프로그램은 서울시 평생학습포털에서 온라인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수강료는 무료다.

<그림 3-4> 서울시민대학 안내

2016년 1기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청 시민대학과 똑섬·은평·중랑 학습장, 14개 대학연계 시민대학²²⁾에서 관련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시민청 시민대학에서는 삶의 터전, 시민민주주의, 예술적 감수성, 인문학적성찰로 구분하여 강좌가 개설되었다.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높은 시민민주주의 부문의 강좌로는 ‘영화로 만나는 20세기혁명사’, ‘역사의 주인은 누구인가’, ‘행복한 평화, 너무 쉬운 통일’, ‘항일과 친일의 역사를 묻는다’, ‘세계사와 함께 보는 한국 현대사’, ‘천하(天下)를 만난 사람들 <조선 지식인, 세계와 이야기하다>’의 6개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들 수업은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개설되었으며, 대학의 연구교수, 교원, 뉴스 편집국장, 민간단체 종사자 등 다양한 경력을 지닌 강사들을 통해 진행되었다.

똑섬학습장 시민대학은 인문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교양인문, 생활인문, 세계인문으로 구분되어 개설되었다. 은평학습장과 중랑학습장 시민대학도 똑섬학습장과 비슷하게 인문교양과정으로 개설되었는데, 은평학습장의 경우 독서지도사, 평생교육사, 예술지도사 등의 전문가 역량강화과정도 일부 개설되어 운영되었다.

대학연계 시민대학에서는 각 대학별로 적게는 1개에서 많게는 6개의 강좌를 개설하였으며, 고전과 건축, 동양사상, 문화철학사상, 민주시민, 세계시민, 여성, 예술, 인권, 종교, 통일, 한국문화 등 대학별로 특화된 인문과정으로 구성하여 제공하였다. 14개 대학, 총 43개 강좌를 운영하며, 그 중에 민주시민교육 강좌로는 동국대의 ‘시민교육론/시민정치론/시민실천론’, 성공회대의 ‘민주시민, 왕을 말하다’ 2개가 개설되었다. ‘시민교육론/시민정치론/시민실천론’ 강의²³⁾는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과 원리, 실태를 이해하고, 민주주의 의식을 공고히 함으로써 민주정치 참여를 위한 시민적 실천능력을 제고하고자 개설되었다. 수업은 강의식과 토론식 형태가 병행되며, 강의 회차에 따라 총괄 강사 외에 전문가가 같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구성되었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개설되어 오고 있다. ‘민주시민, 왕을 말하다’ 강의는 과거 전제 군주의 정치를 민주 시민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민주정치체제와 전제군주제를 비교하여 주권자로서의 시민성 형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출판기획 문사철 대표가 강의하며, 역사를 민주 시민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하고 있다.

22)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공회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에서 실시되었다.

23) 세부 강의계획서는 부록3 참조.

서울시민대학 시민교육 강좌 사례

[성공회대] 민주시민, 왕을 말하다

- 강사 : 강응천
- 강의일시 : 2016년 4월 1일~6월 10일(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 강의장소 : 성공회대학교 승연관 1503
- 학습목표 :
 - 과거 전제 군주의 정치를 민주 시민의 관점에서 재평가할 수 있다.
 - 민주 정치체제와 전제 군주제를 비교하여 주권자로서의 시민성을 형성할 수 있다.
- 학습개요

민주주의 시대의 주권자는 모든 시민이고 전제군주 시대의 주권자는 왕 한 사람이다. 민주주의는 수천년 전제 왕정을 극복하고 이제 막 싹이 튼 정치체제이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적 시각에서 과거의 왕들을 평가하는 방법을 모를뿐 아니라 때로는 전제 군주의 리더십을 배워야 한다는 시대착오적 사고방식을 보일 때도 있다. 조선 시대에 이르는 전제 군주의 시대와 왕들의 역사는 민주 시민의 관점에서 다시 쓰여야 한다.

-세부일정

회차	진행일	진행내용	강사(인적사항)
제1부: 왕이란 무엇이고 그들의 권력은 어디서 나올까?(매주금요일 오전 10-12시)			
1	4. 1	왕을 어떻게 볼 것인가	강응천 (문사철 대표)
2	4. 8	왕과 주체성 — 광개토태왕과 태종 무열왕	
3	4. 15	왕이면서 신하인 존재 — 고려의 ‘충(忠)’ 자 돌림 왕들	
4	4. 22	왕위 계승의 조건 — 당 태종과 조선의 태종	
5	4. 29	현대 한국인의 콤플렉스 — ‘대왕’ 세종	
제2부: 유형별로 살펴본 전제군주의 주권행사 방식			
6	5. 13	권력 사유화의 아이콘 — 연산군	강응천 (문사철 대표)
7	5. 20	왕과 신하가 권력을 나눌 수 있을까? — 중종	
8	5. 27	백성을 버리고 지킨 왕권 — 인조	
9	6. 3	왕국과 민국 — 영조와 정조	
10	6. 10	마지막 왕, 첫 번째 황제 — 고종	

특성·은평·중랑 학습장과 시민청 시민대학, 대학연계 시민대학에서 개설된 강좌들 대부분은 인문학적 소양과 예술적 감성을 높이기 위한 과정들로, 시민의식, 시민교육과 관련한 강좌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교수자들이 다양한 배경을 지니고 있으며, 연계대학 강좌들의 경우 연계대학의 교수 또는 학위소지자인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대학강의 수준의 내용과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 대학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대학에 입학하지 않고도 대학강의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다만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적게 개설되어 있는 점은 아쉽다.

IV.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선관위의 현황과 역할 분석

1.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선관위의 법적 근거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되며,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제31조)”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교육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교육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선거연수원은 다음과 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근거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과정을 운영 중이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14조(선거제도)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자의 주권의식의 양양을 위하여 상시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선거연수원) ① 선거·정당사무에 관한 공무원의 교육과 선거·정당관계자에 대한 연수를 위하여 사무처에 선거연수원을 둘 수 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선관위는 특정 기관이나 단체의 교육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특별 연수기관의 유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규정에 의한 「선거연수원 운영규칙」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방침과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선거연수원 운영규칙

제2조(교육 연수방침) ① ...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교육은 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교양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 선거, 정당, 정치자금관계자에 대한 연수는 관계 법규의 이해 및 실무처리
제3조(교육 연수과정) ① ... 교육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기본교육·전문교육·특별교육으로 구분하며, 각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평생교육법에는 평생교육의 목적과 정의, 국가 및 지방단체의 평생교육에 대한 역할과 의무, 평생교육사의 자격, 업무, 양성기관 배치,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평생교육기관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p>평생교육법</p> <p>제2조(정의)</p> <p>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나.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p> <p>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p>
--

법 조항을 기반으로 교육기관으로서 선관위(선거연수원)를 살펴보면, 평생교육기관과는 여러 측면에서 상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기관과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 기관인 선거연수원의 목적과 이념에서 차이를 보인다. 평생교육기관은 교육 수요자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식 위주의 교육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둔 반면,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성이라는 가치를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교육대상에 있어 평생교육기관이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반면, 선거연수원은 대체로 공무원, 교원, 선거·정당 관계자 등 한정된 대상을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차이뿐만 아니라 선관위가 평생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법적 체계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선관위는 평생교육기관 유형 중 제 4유형인 직능단체의 특별연수기관의 평생교육에 속하는데, 만약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평생교육법과 선관위법 등 관련 법적체계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2. 선관위 민주시민교육 현황

1) 현황

민주시민교육은 국민이 주권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선거·정치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주적 가치와 지식·능력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함양하는 학습을 의미하며,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표로 하는 교육이다. 민주시민교육은 첫째, 헌법적 가치인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둘째, 민주주의 원리인 다수결 원칙을 학습하며, 셋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며, 넷째, 민주시민사회에 적합한 역량 있는 시민을 양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1996년 개원한 이래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는 선거·정당관계자 연수,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연수뿐만 아니라 선거법 공개강좌, 교원연수까지 포괄하였다. 2000년 선거연수원에 정치교육과를 신설하면서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화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의 저변을 확대하였고, 정당간부연수, 시민단체간부 연수, 언론사 기자 연수, 강사양성과정 운영, 미래 유권자 대상 현장체험과 퀴즈 등을 실시하였으며, 독일 연방정치교육원과 교류·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는 등 국제교류도 활발하게 진행하였다. 2006년 정치교육과를 시민교육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민주시민교육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다. 교육 분야를 선거관계자 연수, 여론형성층 연수, 교원 및 대학생 연수, 일반유권자 연수, 미래유권자 연수, 민주시민교육 기반 조성 등 6개로 나누어 연수를 실시하였고,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열린 학습서비스 제공, 민주시민교육 국제 심포지엄 개최, 웹진 발행, 관학 협동 과정을 통한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등으로 활동을 확대하였다. 2011년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선거연수원만으로 학습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지면서,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로 확대하였고, 초·중등 청소년리더 연수, 새내기 유권자 연수,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교원연수, 다문화가족 연수 등을 시·도 위원회에 위임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2013년 시민교육부로 부서 명칭을 개편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다. 예를 들어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로 강연 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오피니언 리더 대상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대한민국을 감동케 하라’는 타이틀로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를 운영하였다. 또한 정당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당사무처 간부 및 일반 당원 연수, 성인지 예산 확보를 통한 여성 정치참여 연수, 전국 단위 선거 시 선거법 안내 및 투표참여 제고를 위한 ‘선거아카데미’, ‘유권자 공감찾아가는 선거강연’ 등 다양하고 유익한 유권자 중심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도 선거연수원은 교육목표 및 전략에 ‘선거·정치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목표로 설정하면서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표 4-1> 선거연수원 교육목표 및 전략

<p>목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임무와 역할에 부응하는 직원역량 강화 ✓ 선거·정치 발전을 견인하는 민주시민의식 고양
<p>추진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거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직원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리더십 향상과정 확대 • 직급별 핵심역량강화과정 효율적 추진 • 수원연수원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교육·연수 강화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 함께하는 유권자 연수 활성화 • 선거·정당관계자 연수 강화 ❖ 사이버교육 콘텐츠 수준 지속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이버교육 콘텐츠 다양화·내실화 • 외국어 교육과정 강화 ❖ 외국 선거관계자 연수 만족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수국 수요자 중심의 정보 제공 • 연수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연수효과 제고
--	---

출처: 선거연수원(2016).

특히 선거연수원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민주시민 양성’을 중점 추진과제로 설정하였다. 국민과 함께하는 유권자 연수의 활성화와 선거·정당관계자 연수 강화를 목표로 다음에 중점을 두어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 함께하는 유권자 연수의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참여형 사업 지속적 발굴 및 확대추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모 추진, 강연콘테스트 주제, 형식 개선) • 여성·대학생 등 유권자 연수 프로그램 다양화 • 「민주주의 선거교실」 운영 등 미래유권자 연수 중점 추진 ○ 선거·정당관계자 연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사무처간부 및 당원연수의 내실화 • 정당의 연수 수요에 부합하는 콘텐츠·프로그램 등 개발·보급 • 국회의원 선거 대비 선거관계자 대상 맞춤형 연수 (정당 회계책임자 등)

위와 같은 목표 및 추진과제 설정에 따라 2016년 선거연수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운영중에 있다.

첫째, ‘선거·정당 관계자 과정’은 정당사무처 간부, 당원, 정당 회계책임자, 정당 사이버담당자, 예비 정치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정당사무처 간부 연수는 국회의원 선거 대비 정치관계법 이해를 통한 준법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무처 간부 등의 역할 강화를 통한 정당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선거·정치문화 선진화를 위한 정치, 인문, 사회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선거·정치 및 정당발전 방안 등을 토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반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수는 정당의 건전한 발전과 정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당원의 역할을 제고하고, 당원 중심의 민주적 정당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어, 정당발전을 위한 당원의 역할과 과제, 당원의 민주적 실천역량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우수사례,

정당 고유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예비정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아카데미는 선거정보 제공을 통해 효율적인 선거운동 방향을 제시하고, 정치관계법의 올바른 인식으로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 것이 목표이며, 이에 근거하여 입후보관계자가 알아야 할 선거운동방법, 주요 제한 금지행위를 안내하고, 정치자금 회계실무와 효율적인 사무처리 방안을 토론하며, 선거방송토론에서 활용 가능한 전략적 토론 진행방식을 특강 및 실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둘째, ‘일반유권자 과정’은 오피니언 리더, 교원, 기관 및 단체 회원, 대학생뿐만 아니라 여성유권자와 단체회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에서는 각계 지도층, 정치지방생 등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정치·사회지도자를 양성하고, 선거·정치문화 발전을 견인하는 전통 있는 아카데미 정착을 목표로, 전문지식 및 소양교육, 사회이슈 토론 및 발표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 정치참여 연수는 여성의 민주시민의식 함양 및 정치관심 제고, 여성의 정치참여 증진·확대로 양성평등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여성 정치참여의 의미, 여성 정치참여 확대방안 등을 교육내용으로 한다. 교원연수에서는 미래유권자의 올바른 주권의식 함양에 필요한 교수능력을 함양하고, 미래유권자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이해시키고자, 교육자의 역할, 참여의 중요성, 다양한 교수법, 선거제도와 정치발전에 대한 이해 등을 중점 교육내용으로 한다. 대학생 연수는 청년지도자 정치캠프, 학점인정과정, 정치참여과정 등으로 구성되는데 민주시민의식 함양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셋째, ‘미래 유권자 과정’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 미래지도자 정치캠프는 민주국가에 공헌할 건전한 리더를 양성하고, 선거절차의 체험을 통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어, 정책선거 체험을 통한 매니페스토 실천 운동 학습, 미래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민주적 리더십 배양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한다. 새내기유권자 연수는 주권행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바람직한 정치참여방법을 습득하는 것을 목표로, 유권자 역할 및 주권행사의 중요성,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선거·정치참여 등을 교육하고 있다. 민주주의 선거교실에서는 민주시민의식을 배양하고, 미래유권자의 주권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두어, 유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 주권행사의 중요성, 민주사회 핵심가치를 학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넷째, ‘한국사회 정착도움 과정’은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다문화가족 연수는 민주주의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선거·정치 참여 의식을 증진하고,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이해를 통한 한국사회 조기 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국 선거제도의 이해, 선거참여의 중요성과 가치를 교육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연수 역시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및 선거제도 이해를 통한 조기정착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민주주의 및 선거·정치제도의 이해, 올바른 권리행사의 이해 및 참여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선거연수원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운영중에 있다. 전

문강사 과정은 ‘민주시민교육강사 양성과정’과 ‘민주시민교육강사 역량 심화과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다.

<표 4-2> 2016년도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운영 현황

구 분	과 정 명	대 상	기 간	일 정	운 영		비고
					횟수	인원	
합 계	21개 과정				2,597	147,050	
선거·정당 관계 자 정 과	정당사무처 간부 연수	정당사무처 간부·직원 등	2일	연 중	46	4,600	집합
	당 원 연 수	일반당원	1~2일	연 중	200	20,000	집합
	정당회계책임자 연수	중앙당 및 시·도당 회계책임자 등	1일	2월	1	40	집합
	정당사이버담당자 연수	정당 사이버담당자 등	1일	2월	1	40	집합
	인터넷언론(포털업체) 관계자 연수	인터넷언론(포털업체) 관계자 등	1일	2월	1	40	집합
	선 거 아 카 데 미	예비정치인 등	3일	10~11월	1	40	집합
일 유 권 자 정 과	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오피니언리더	15주	3~6월 8~12월	2	80	집합
	여성 정치 참여 연수	여성유권자·단체회원·정치지망생	1~2일	연 중	45	3,600	집합
	교 원 연 수	초·중등학교 교원	5일	여름방학 기간 중	16	640	집합
	시민·사회단체 등 연수 (선거강연 포함)	기관·단체 회원 등	1~2일	연 중	390	11,700	집합, 출강
	청년지도자 정치캠프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이수자	2일	2월	1	60	집합
	대학생 학점인정과정	수도권 소재 대학생	15주	3~6월 9~12월	2	180	집합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대학생	1~2일	연 중	5	200	집합
미 유 권 자 정 과	미래지도자 정치캠프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회장 등	3일	7월	1	130	집합
	청 소 년 리 더 연 수	초·중등학생	1일	연 중	1,200	60,000	출강
	새내기유권자 연수	고등학교 3학년	1일	11~12월	300	36,000	출강
	민주주의 선거교실	중학생	1일	5~10월	200	6,000	집합
한국사회 정착도움 과 정	다 문화 가 족 연 수	다문화가족	1일	연 중	160	2,400	출강
	북한이탈주민 연수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	1~2일	연 중	20	1,100	집합, 출강
민주시민 교 육 전 문 강 사 과 정	민주시민교육강사 양 성 과 정	일반인·전임직원	2~3일	6~8월	2	80	집합
	민주시민교육강사 역 량 심 화 과 정	외부강사	1일	4월	3	120	집합

출처: 선거연수원(2016).

<표 4-3>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 현황

	민주시민교육강사 양성과정	민주시민교육강사 역량 심화과정
교육목표	전문 강사요원 발굴·양성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기반 확충 민주시민교육 확대에 따른 우수 강사요원 확보 및 강의 역량 제고	강사의 전문성 제고로 민주시민교육의 질적 향상 도모 유권자 대상 선거강연 대비 강의역량 배양
교육운영 계획	대상: 1차(내부강사 40명), 2차(외부강사 40명) 인원: 80명 정도 기간 및 횟수: 2-3일(집합), 2회 일정: 6-8월	대상: 외부강사 인원: 120명 정도 기간 및 횟수: 1일(집합), 3회(1회 40명 정도) 일정: 4월
중점교육 내용	강의 발표를 통한 검증된 민주시민교육 우수 강사 발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이해 및 실습	시·도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주요내용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및 경험사례 토론 등
교과목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개인별 강의시연 및 상호 코칭 민주시민교육 시범강의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참여식 교수법 강의안 작성요령 및 PPT 활용실습 분임 공동강의안 작성 및 발표 강의에 필요한 스피치 훈련 선거·정당·정치자금 제도의 이해	소통하는 강의기법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한 참여식 교수법 토론의 이해와 실습 선거·정당·정치자금 제도의 이해 경험사례 토론

2) 내용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과정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선거·정당관계자, 유권자 등
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을 확대하여 선거, 정치문화를 개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건전
한 민주시민의식 함양으로 선거·정치참여를 제고하여 민주주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표 하에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선거·정치과정에 능
동적으로 참여하는데 기반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교과목을 교육하고 있다.

<표 4-4>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과 내용

목표	주제	교육 내용
민주시민의식 함양	주권의 의미와 가치	국민주권론, 참정권의 확대, 투표의 효용성, 주권의 의미와 선거참여
	민주주의 기본원리	민주주의 철학과 사상,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
	민주시민 자질과 소양	인간의 존엄성, 자유와 평등, 유권자의 권리와 의무, 자율과 책임
	선거와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화,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선거·정치과정 참여	선거·정치제도	정치관계법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한국 선거제도
	선거·정치참여의 필요성	선거운동, 사이버 선거운동, 여성 정치참여
	정당 및 후보자	외국의 정당운영, 정당발전을 위한 당원의 역할, 선거홍보물, 방송토론
	정책선거	정치문화 개선, 매니페스토와 약속

3) 방법

선거연수원에서는 다양한 교육 수요자를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선거·정당 관계자 과정은 정당사무처 간부 및 직원, 일반당원, 중앙당 및 시·도당 회계책임자, 정당 사이버담당자, 예비정치인 등을, 일반 유권자 과정은 오피니언 리더, 여성유권자 및 여성단체회원, 교원, 대학생 등을, 미래 유권자 과정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한편 한국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다문화가족과 북한이탈주민에게도 민주시민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 기간은 1일부터 15주에 이르며, 집합과 출강 방식이 병행되고 있다.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교육방식은 ‘열린모형’을 중심으로 ‘닫힌모형’을 가미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열린모형’이란 문제해결 중심 수업으로 수평적 방식(참여식) 교수법을 의미하며, 학습과정은 참가자의 자유학습·체험활동·경험 및 발표, 본보기(사례)학습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닫힌모형’이란 내용전달 중심의 수업 방법으로 수직적 방식(강의식) 교수법을 의미하며, 학습과정은 교수자의 지도에 따라 제시·전달·이야기·강의·시범·설명 등으로 이루어진다. 민주시민교육은 제시된 학습주제에 대해 자기인식 또는 자기계몽이 필요하므로 학습자 중심의 자유학습·체험 및 경험활동, 본보기(사례) 학습이 중요시된다. 또한 민주시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가치와 규범에 부응하여 행동 할 수 있는 역량과 자세, 자신과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대화, 토론, 역할게임 등 학습자가 직접 참여하면서 순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여형식의 교수방법이 적합하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에서는 이러한 교육방식을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어 다음과 같은 교수법을 교과목으로 개설하여 진행하고 있다.

- 참여식 교수법
- 스피치 훈련
- 상호 코칭
- 소통하는 강의기법
- 토론의 이해와 실습

최근 선거연수원에서는 기존의 강의 위주 교수법에서 벗어나 체험·공감형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참여를 통해 실습, 체험을 바탕으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미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민주주의 선거교실’에서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표 4-5> ‘민주주의 선거교실’ 교육 사례

교과목	교육배정시간		
	계	강의	참여(실습)
합 계	4	0.5	3.5
민주주의 선거관리위원회	1	0.5	0.5
선거! 함께 해봐요(모의선거체험)	1	-	1
매니페스토와 약속(정책선거체험)	1	-	1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요(토론체험)	1	-	1

3. 분석

선관위를 평생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검토하였을 경우, 민주시민교육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에 용이하며, 만약 선관위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민주시민교육 부문에서 강점을 지닐 수 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니고, 시·도 선관위를 비롯하여 전국적인 체계를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을 전담하는 선거연수

원이 설치되어 민주시민교육 관련하여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다. 1996년부터 선거연수원은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저변을 확대하였으며, 다양한 이벤트²⁴⁾를 통한 유권자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2011년부터는 전국 시·도 선관위에 새내기 유권자 연수, 대학생 정치참여과정, 교원연수, 다문화가족 연수 등을 위임하여 실시함으로써 전국적인 교육체계도 갖추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통해 그 동안 민주시민교육의 자격을 지닌 강사를 다수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의내용 및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기관과 연계 및 협력에 강점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한계도 지닌다.

첫째,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방향 등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보니, 다수의 기관에서 개별적, 산발적으로 교육을 추진하면서,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공유와 활용이 부족한 상태이다. 또한 각 교육 담당 기관들 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의 대표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둘째, 현재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이 정당 관계자, 학생, 교원 등 다양한 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평생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민주시민교육 체계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이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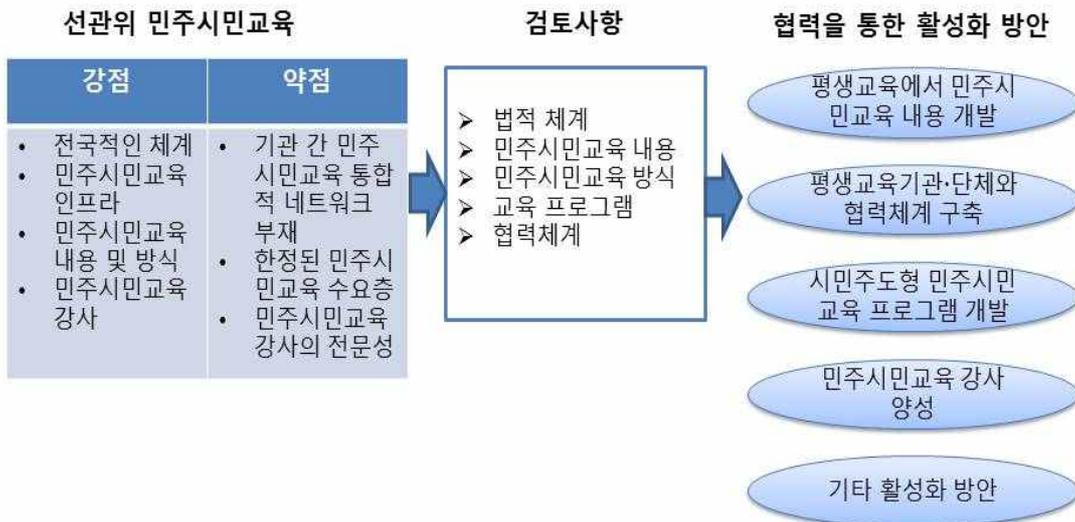
셋째, 선거연수원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이 존재하지만 강사 전문성과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선거연수원의 전문강사 과정을 살펴보면, 민주주의, 국가, 시민 등의 내용보다는 교수법 등 형식에 더 중점을 두었고, 내용에 있어서도 민주시민교육의 모듈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전문강사 교육과정의 기간 및 횟수 역시 매우 짧은데, 강사 양성과정의 경우에는 2-3일 간 2회의 총 20시간이고, 역량 심화과정의 경우에는 1일 3회의 총 10시간이 배정되어 있다. 이 점에서 전문강사의 전문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또한 전문강사가 배출되었음에도, 강사의 활용이 제대로 되지 않는 실정이다. 따라서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가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비하여 전문강사 인증 및 자격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만약 협력이 이루어진다면 선관위의 공신력 있는 전문강사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및 방식도 평생교육기관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4) 예를 들어, 유권자 중심의 선거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라는 주제의 강연콘테스트를 개최하고,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을 감동케하라'는 타이틀로 민주시민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유권자 공감 찾아가는 선거강연' 등 유권자 중심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표 4-6>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선관위의 SWOT 분석

강점	약점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 및 인프라 구축 다수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선관위의 전국적 체계 구축 선관위의 전문강사 교육과정	민주시민교육의 한정된 대상층 짧은 교육 기간 한정된 교육 내용 전문강사 교육과정의 한계(형식에 중점, 짧은 기간 및 횟수 등)
기회	위협
평생교육기관과 전국적 협력체계 구축 가능성 평생교육기관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급 가능성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파견 가능성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 방향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민주시민교육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의 부재

<그림 4-1>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협력 방안



V. 평생교육기관·단체 등과 선관위의 협력을 통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1.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내용 분석을 통한 선관위의 역할

앞서 제3장에서는 주요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시민참여교육,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많은 기관에서 평생교육을 진흥하고자 다양한 사업과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지만,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측면에서는 한계점들이 존재한다. 가장 큰 한계점은 평생교육에서 시민참여 주제영역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설되지 않고 있으며, 그 프로그램의 수 또한 매우 소수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한계는 국가와 광역 수준의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국가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교육정보의 원활한 공유·유통·활용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을 구축하여 타 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그러나 시민참여 프로그램에는 취미·교양 및 자원봉사교육 등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운영 모습 또한 시스템을 통한 홈페이지 간 연계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전남 평생교육진흥원의 다모아 평생교육정보망에서 시민참여교육을 검색해보면 시민참여활동 프로그램들로 분류된 강좌들이 대다수지만 강좌들 대부분이 시민참여교육의 정의와 맞지 않는다. 시민책무성 프로그램에는 시민의 책임이나 의무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보기 어려운, 직장인스피드요리, 피부관리와 메이크업, 체력단련실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다보니 시민의식 및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그나마 일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서울시민대학과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소수의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되어 있다.

이러한 현황은 평생교육영역에서 시민참여교육 부분이 매우 저조하고 따라서 시민참여 증진과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시민참여교육을 시민의식 함양, 올바른 정치 문화 이해에 기반한 사회참여·정치참여로 정의한다면, 시민의식·주권의식 함양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해 온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선관위가 평생교육의 영역에서 단순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아닌, 시민참여교육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개발 및 확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관위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 시민단체, 광역자치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평생교육 부문에서의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한 주체로서 역할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의 협력을 통해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확산 주체로

가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강좌는 타 영역의 강좌에 비해 개설이 어려운데, 이는 해당 강좌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강사 섭외의 어려움과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 등에 기인한다. 일부 수강희망자들이 강좌 개설을 희망해도, 학교 측에서는 강좌를 운영할 강사를 모집할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개설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강사가 개설을 신청하여도 일반 대중들에게 너무 어려운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의 경우는 학교 측에서 폐강을 우려하여 개설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개설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프로그램이 다예요. 신규로 강의 개설을 원하면 (개설이) 가능해요. 지금은 다 끝났고, 2학기의 경우 5월이나 6월, 1학기의 경우 10월 정도에 공지사항에 글이 올라오는데, 제언을 하면 심사를 통해 이루어져요. 심사한 뒤에 빠르면 다음 학기에 개설될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강사들이 제언을 하세요. 강사모집에 한계가 있다 보니 일부 수강생들이 강의 개설을 원해도 잘 되기 어려워요. 다수의 수강생들이 개설을 희망하면 학교쪽에서도 노력은 해보지만요.”

- 서울 소재 OO대학교 평생교육원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6년 8월 3일-

“강사분이 강의개설을 신청하시면 심의위원회에서 개강과 폐강을 결정해요. 수강생들이 희망한다고 해서 개설되기는 어렵구요. 강사도 모집해야 되니까요. 개인적으로 개설 신청을 할 경우 대부분 개설이 어려운데, 내용이랑 강사경력이란, 또 수요량도 맞아야 하니까요. 수요가 없어서 개설하고 폐강 되는 경우도 꽤 있어요. 신규 강좌일 경우에는 좀 힘들구요. 기관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강좌개설 공고가 나기 전에 미리 학교에 논의를 해야 해요. ... 말씀하신 시민교육, 민주주의 프로그램은 대중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경우 개설하기가 어려워요.”

- 부산 소재 OO대학교 평생교육원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6년 8월 3일-

따라서 선관위는 기관 대 기관으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의 협력·연계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강사를 지원함으로써 프로그램을 확대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대중적인 내용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인문학과 교양 수준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되, 시민들의 민주시민의식 증진과 사회·정치 참여에 대한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는 수강료 무료의 단기 강좌로도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선관위의 내부 자원과 역량을 고려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양수준으로 단기로 개설하고 싶으시면 인문학 수업으로 동계에 5주짜리 개

설이 가능해요. 수강료도 없이 개설 가능하구요.”

- 부산 소재 OO대학교 평생교육원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6년 8월 3일-

또한 선관위는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같은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에 기반하여 시민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시민단체의 경우,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재원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의 경우,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정부나 지자체 등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관운영을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원격 평생교육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교육 프로그램은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요. 근데 자체 프로그램은 거의 없구요, 지자체 등에서 교육비(사업비)를 받아서 이루어져요. ... 원격평생교육원은 수익사업을 위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이 중심이에요. 원격평생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초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나중을 보면 시드(seeds)를 만드는 게 중요하니까요. ...

정부사업이나 지자체사업을 받아서 하는, 지금은 그렇게 운영을 해요. 민간단체들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옛날에 비해서 목적사업을 정말 해야 되는 교육임에도 하지 못하는 것들이 민주시민교육인거죠. 아이들을 그 지역의 민주시민교육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 교육운동이 시작되었던 건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부나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재정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비죠.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목적사업들을 하다보니까 저희만의 색깔이라든가 그렇게 내기 어려운 부분들도 조금 있고, 지속적으로 하는게 어려워요. 지자체나 중앙기구들 같은 경우는 한 사업에 지원해 주는게 정해져 있거든요. 거의 한 3년 이상 되면 스톱되니까. 지속적으로 가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지속하려면 재정이 계속해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비만 지원을 해주는 것도 한계를 두니까, 운영비는 고사하고...”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6년 8월 5일-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단체의 설립 목적과 비전에 따른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거나, 또는 시민교육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지니고 있다. 강의를 위한 강사들 명단을 대부분 갖고 있으며, 교육을 진행하는 데에 프로그램의 내용과 강사 측면에서의 어려움은 크지 않다. 다만 교육 진행을 위한 재정적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큰 경우가 많다. 따라서 선관위는 해당 시민단체들과 프로그램의 내용과 방식 등에서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상대를 동등한 사업 파트너로 인식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단체들과의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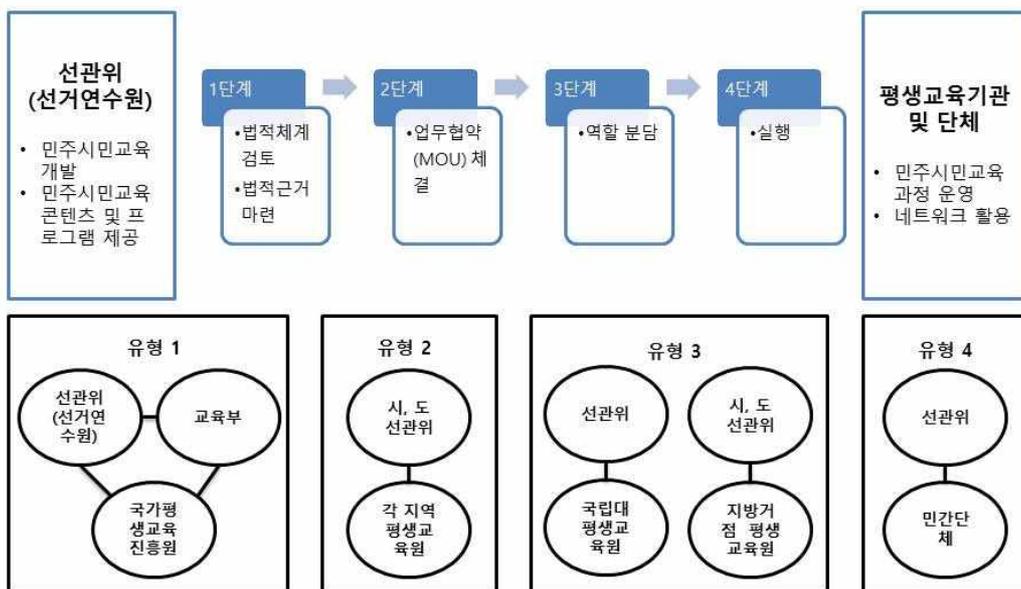
“외부기관과의 협력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외부 기관들과도 사업을 같이 운영하기도 해요. 하지만 정부나 지자체와 일을 하면 민간단체를 동등한 주체로 인식하기보다는 오히려 병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전에 학부모지원센터 경험을 보면, 단체의 중요한 정보를 달라고 해서 노하우를 알고 난 후에는 사업에서 배제된 적도 있어요. 외부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시민교육을 진행하는 것은 좋은데, 파트너로서 동등하게 인식해주는 게 필요해요.”

-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관계자와의 인터뷰, 2016년 8월 5일-

이 외에도 서울시처럼 적극적으로 민주시민교육 실시하고 있는 자치단체들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조례 제정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진흥하고자 하는 광역자치단체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 추세에 따라 중앙기관인 선관위가 지방정부들과의 협력·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선관위가 지니고 있는 재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자체와 연계시키는 방안을 도모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시민참여와 민주시민교육 사업들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고려된다.

2. 평생교육기관·단체 등과 선관위 간 협력체계 구축

<그림 5-1> 선관위와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의 협력체계



1) 중앙 단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평생교육추진체계에서 핵심기구는 교육부와 광역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이라고 할 수 있다. 전담기구인 중앙정부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광역자치단체는 각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을 설립하고 있다.

중앙 차원에서 선관위는 교육부를 중심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선관위의 선거연수원은 그 동안 선거·정당 관계자뿐만 아니라 대학생, 시민단체 회원, 교원, 북한이탈주민 등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였고, 교육부 산하의 평생교육진흥원은 중앙 차원에서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을 담당하면서 평생교육체계를 구축하였다.

중앙 정부 수준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경우, 다음과 같은 가능성 및 한계를 우선 검토해야 한다. 중앙 단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중앙 차원에서 통합적인 체계 구축이 가능하며, 선거연수원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그 동안 구축했던 노하우를 교류하면서 공통의 틀을 설정하기에 적합하다는 강점이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 등 법체계에 있어 어느 법을 상위법으로 할 것인가, 하위법에는 어떠한 내용을 포함할 것인가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고, 국가 단위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맞추기 어렵다는 문제도 존재한다.

장점	단점
중앙 차원의 통합적인 체계 구축 가능 선관위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노하우	법적 체계의 문제 공동의 이해관계를 찾기 어려울 가능성

이 점에서 두 기관의 장점을 살리고 한계는 극복하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협력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교육부와 공동으로 관련한 각종 법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평생교육법이 제정되어 있지만, 현재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는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 점에서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을 연계할 수 있는 법 체도를 정비해야 한다. 법 제도 정비를 통해 연계 틀을 설정해야 하며,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민주시민교육과 평생교육의 공동 목표, 교육대상 설정
- 민주시민교육원 설치 혹은 선거연수원의 복합 평생교육 기능 시설(제 2유형) 전환
- 민주시민교육진흥법, 민주시민교육지원법 등 논의
- 평생교육기관·단체에 민주시민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 학점, 학습계좌제, 인증체계 구축

둘째, 중앙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개발 주체와 운영 주체를 구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선거연수원은 민주시민교육 방법 및 내용을 개발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이를 운영하면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다. 체계를 설정하여 선거연수원에서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모듈을 시·도 단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수행하는 방안이다.

-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민주시민교육 전문 강사 양성, 내용 및 방식 등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이행, 각급 평생교육기관 내 교육 장소 제공, 교육과정 개설, 학습 수요자 교육 등

셋째, 양 기관의 공동의 목표, 체계를 구축한 이후, 세부적인 업무협약(MOU)을 체결함으로써 다음의 사항을 결정하고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미 2016년 3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선거연수원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및 선거교육·연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²⁵⁾

- 민주시민교육과정 분야 및 선발인원, 선발기준, 교육기간 및 장소 설정
- 수료시험, 합격기준, 자격증 등 설정
- 양 기관 기획·평가위원회 구성
- 예산 설정

넷째, 기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 차원에서 다음의 점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 민주시민교육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공동 실시
- 체험학습 등에 대한 자원 지원 (ex. 모의선거, 모의국회 등)
- 개발 프로그램의 공동 사용
- 인터넷 사이트 개설 등을 통한 홍보

2) 시·도 단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각 시·도의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차원에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서는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 제공, 평생교육상담 및 프로그램 제공, 그리고 기관간의 연계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종합적으로 지역 평생교육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다.

시·도 단위에 선관위와 평생교육진흥원이 모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자체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각 지역마다 비전과 사명이 다르고, 지역 고유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해야만 한다.

시·도 단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시 다음의 가능성 및 한계를 고려해야 한다. 중앙 단위에서 일괄적인 협력체계와는 다르게 각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각 지역마다 상이한 환경과 다양한 수요로 인하여 이를 세부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고, 각 지역의 조

25) 여기에는 K-MOOC 콘텐츠 공동활용, K-MOOC 등 평생교육 기반에 선거연수원 교육 콘텐츠 연계 활용, 인적 네트워크 공유 및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평생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연계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례안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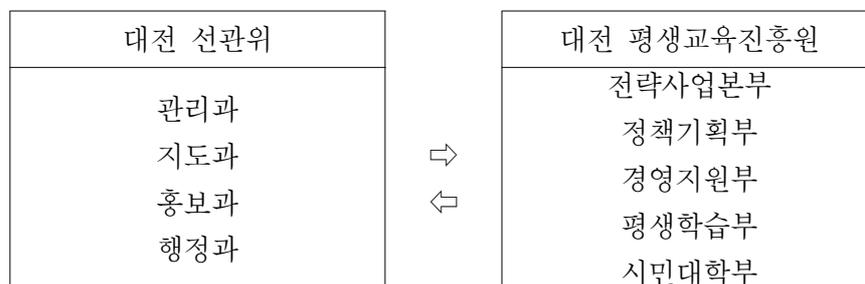
장점	단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체계 구축 가능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제공 가능	각 지역마다 수요가 상이함 지자체마다 상이한 목표 및 방안 조례안의 문제

위와 같은 장점과 한계를 고려하면서, 다음에 중점을 두어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각 지역에 적합한 법적 근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급 선관위, 평생교육진흥원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연결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평생교육진흥조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있다. 이러한 관련법의 검토 및 논의를 통해 각 지역 평생교육진흥원 기반의 민주시민교육 원칙, 체계, 계획, 예산 등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급 선관위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기능적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선관위의 선거연수원에서 개발한 민주시민교육 모듈을 각 지역 선관위에서 평생교육진흥원에 배포함으로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즉 각 지역 평생교육진흥원의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지정하거나 연계된 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전문 강사가 교육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각급 선관위와 평생교육진흥원 및 산하 평생교육 담당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있어 역할 분담을 고려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략방향,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네트워크 구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각 시·도 선관위와 평생교육진흥원은 지역 기반에서 프로그램 수요를 조사하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림 5-2> 대전 선관위와 대전 평생교육진흥원 조직체계의 사례



넷째, 특히 서울시와 경기도 등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한 광역지자체와의 평생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경기도 등은

민주시민교육 관련 다수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맞을 확률이 높고, 다양한 내용 및 방식을 공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시, 경기도의 평생교육 담당 부서와 협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을 공동운영하며, 전문강사 양성과정에 협력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하는 민간단체를 공동으로 지원할 수 있다. 추진방식은 서울시, 경기도의 평생교육과와 선거연수원 시민교육과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단체장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주무부서를 통한 단계별 실제 협력 내용을 추진 및 실행할 수 있다.

3)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과의 협력체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대학의 신뢰도와 명성 때문에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교양뿐만 아니라 학위제와 학점은행제 등 학위과정도 운영한다는 점에서 선호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 과정이 아직까지 다수 설립되어 있지 않고, 가장 활성화 된 평생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협력체계 형성에서 강점을 지닌다. 반면 이미 선거연수원은 다수의 대학과 단과대학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관련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평생교육원과 협약 체결 시 중복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장점	단점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수강생 규모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 민주시민교육과정이 설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될 수 있음	이미 선거연수원-단과대학 중심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²⁶⁾ , 평생교육원과 또 다른 협약체결의 중복 여부

위의 장점과 단점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원과 업무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물론 선거연수원은 이미 다수의 대학들과 협약에 체결되어 있지만, 평생교육원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립대학의 평생교육원은 협력 체계 구축에 있어 중앙정부와도 협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또한 서울대 평생교육원의 경우, 이미 일부 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강의 커리큘럼, 콘텐츠, 방식 및 전문교사 활용 등의 측면에서 협력을 추진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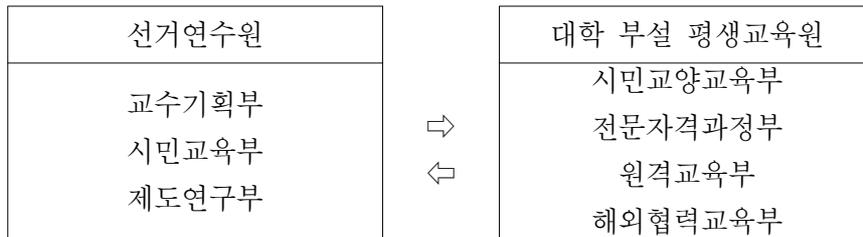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강좌 개설

26) 예를 들어, 선거연수원은 한신대 사회과학대학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교과목에 대한 강의 콘텐츠를 제공하고, 강사 등 관련사항을 협의 하에 지원하며, 인턴십제도, 학생 연수과정 등을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경인교대의 교육전문대학원과는 민주시민교육 및 정치관계법 관련 양 기관의 연구 관련 정보의 교류, 연구 프로젝트 협력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였다.

- 전문 강사진 공동 활용 및 상호 자료 교환
-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
- 학점인정, 학위과정 합의
- 온라인 강의 공동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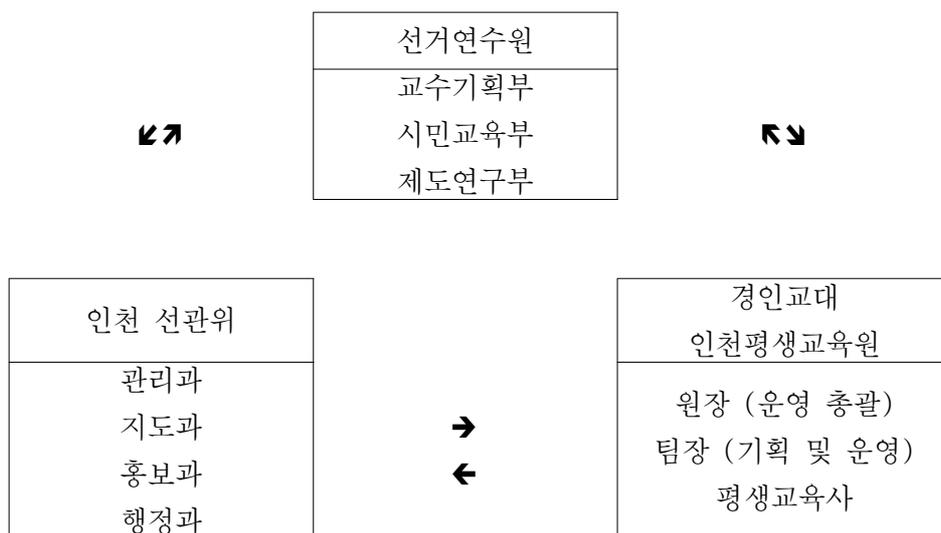
둘째, 선거연수원 조직과 평생교육원 조직의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이는 주무부서 간 합의 및 논의를 통해 역할을 분담하고 추진하는 단계로 진행된다.

<그림 5-3> 선거연수원 및 서울대 평생교육원 조직체계의 사례



셋째, 선거연수원-시·도 선관위-지방거점 국립대학 평생교육원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이미 시·도 선관위에서는 선거연수원의 위임을 받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있는 평생교육원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 지역에 적합한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5-4> 선거연수원, 인천 선관위, 경인교대 인천 평생교육원 조직체계의 사례



4)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현재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 흥사단, YMCA, 경실련, 참여연대 등 다수의 민간단체에서도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민간단체의 경우, 단체의 목적 및 방향에 적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정부기관 등에 비해 유연한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KACE)의 경우, 중앙과 지역협의회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통합적, 일괄적인 체계 및 틀 구축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고, 정부-민간단체 간 하향식(top-down) 방식의 체계 구축 시 간섭이나 개입의 소지가 있으며, 무엇보다 재원 마련과 자금 지원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장점	단점
정부 기관 등에 비해 유연한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함. 다양한 커리큘럼 개발 등이 가능 지역협의회 네트워크 활용 가능 KACE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전문성 및 전국적 체계 구축	체계구축의 문제 예산 부족 가능성 정부-민간단체 협약 체결 시 top-down 방식의 문제 및 유연성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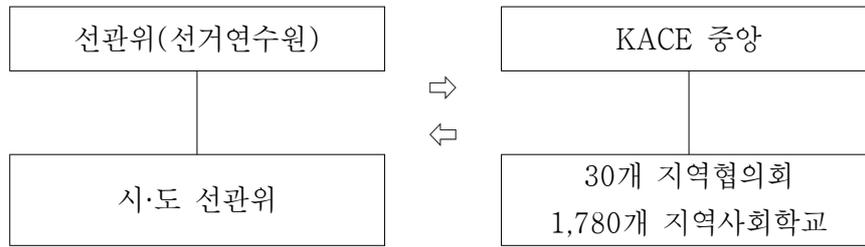
선관위가 민간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시 위와 같은 가능성 및 한계를 염두에 두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프로그램 과정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민간단체에서는 이미 다양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공유, 수강생 교류 등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사회과 교사 직무연수 과정을 공유할 수도 있다.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 및 강좌 개설
- 전문 강사진 공동 활용 및 상호 자료 교환

둘째, 교육 내용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이다. 선거연수원에서 이미 구축한 민주시민교육의 내용 및 방식을 민간단체와 공유함으로써 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셋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와 같은 단체와 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중앙과 지역단위에서 체계적인 네트워크 및 체계 결성이 가능하다.

<그림 5-5> 선거연수원-KACE 조직체계의 사례



5) 기타 협력체계 구축 방안: 교육과정교환 및 사전교육체제 구축

선관위가 평생교육기관, 민간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교육과정교환과 사전교육체제 구축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선관위가 진행하고 있는 각 교육과정 중 일부 차시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이다. 예를 들어, 기관과 MOU 등을 체결하여 평생교육기관에서 총 10차시로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1-2개 정도의 차시를 선관위의 교육동영상, 선거교육내용 등에 활용하거나, 선관위의 전문강사가 일부 차시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연수원 또한 운영 프로그램에 있어 평생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강의 중 일부를 관련 내용으로 구성 및 활용할 수 있다. 선관위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평생교육기관에서 부족한 교육내용 및 방식을 제공하고, 평생교육기관은 기존의 네트워크, 체계적 운영, 다양한 교육대상 등을 기반으로 선관위와 협력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평생교육기관·단체와의 상호교환 및 협력은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전교육체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이다. 여기에는 사전교육체제의 구축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국가, 시·도 평생교육기관, 대학, 민간단체와의 MOU 체결을 통해 각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참여교육이나 정치학 관련 교양 교과목 운영에 있어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사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는 시·도 평생교육기관의 시민활동가 과정, 한국지역사회교육협회의 시민리더십 지도자 과정 중 전문가 과정에 있어서도 선관위의 프로그램을 1~2회 사전 이수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성을 갖추도록 할 수도 있다. 사전교육 프로그램 진행 시 협력기관과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방식도 사전에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평생교육 활용 시민주도형 참여식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평생교육단체의 관계자들과의 인터뷰에서 나타났듯이,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학습자의 수요

부족(대중성 미비), 적절한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과의 프로그램 공동 개발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교양수준으로 단기(5주)로 개설하는 경우, 인문학 수업의 무료 강의 형태로의 개설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것이다.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연계와 확대를 위해서는 선거연수원이 먼저 이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관련 프로그램, 네트워크 등 생태계의 조성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진은 ‘시민주도형 민주시민교육 학습동아리 지원 및 운영’, ‘시민주도 민주시민교육 학습프로그램 공모 사업’, 지역사회 환경 및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제공할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퍼실리테이터’ 등을 평생교육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들은 평생교육의 수요와 프로그램 환경을 고려하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수요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시민주도형 민주시민교육 학습동아리 지원 및 운영

□ 목적

-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학습동아리 지원을 통해 다양한 평생교육 민주 시민교육 프로그램 제공
- 시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생활 속 평생교육 차원의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평생교육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학습 참여자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 내용

- 지역특성에 맞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추진
- 생활민주주의, 지역정책 개발 등 학습동아리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다양한 형태의 학습동아리 활동 지원

□ 지원 및 운영

- 관련 주제에 대하여 5인 이상의 학습동아리를 구성, 월 1회 이상 활동 및 학습
- 신청 학습동아리를 대상으로 심사 후, 실비 운영예산 지원, 학습동아리 활동 장소 제공 및 전문 멘토 지원
- 선정 학습동아리 전체를 네트워크하여 전국 단위의 민주시민교육 학습동아리 활동
- 선거기간 등에 공익활동 활용 및 선발

2) 시민주도 민주시민교육 학습 프로그램 공모 사업

□ 목적

-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제안 민주시민교육 학습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시민 문화 조성
- 민주주의를 실천·활성화하기 위한 학습 프로그램 발굴

□ 내용

- 생활 속에서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공모 사업 및 지원
- 다양한 시민제안 학습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 가능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학습현장에서 활용하고 확산하여, 민주주의 실천 기회 제공
-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강의·조사·연구) 지원 등
- 실태조사 분석을 통한 정책수립 반영 및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활동 방향

- 선정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장기적인 차원의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로 발전 및 유지
-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성 함양 프로그램을 운영 중인 전문단체를 통한 선순환 가능한 학습동아리 인큐베이팅 시도

3) 시민참여 민주주의교육 퍼실리테이터 선발 및 운영

□ 목적

- 일상생활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소양을 기르고 성숙한 시민의 삶을 살아가도록 퍼실리테이터 모집 및 운영
- 이를 통한 생활 속 민주주의 시민학습을 지원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내용

- 지역사회 환경 및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제공할 학습 퍼실리테이터를 모집하고 양성
- 학습 동아리, 평생교육 연계 민주시민교육 학습현장에 투입
- 민주시민교육을 필요로 하는 수요기관이 제출한 프로그램 개요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 퍼실리테이터 지원

□ 운용 및 활동

- 선정된 퍼실리테이터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 이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
- 민주시민교육 학습동아리 멘토로 활동
- 전국적인 차원에서 시·도 선관위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의 수요에 맞는 민주시민 역량 제고를 위한 강의, 토론회,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을 구성·제공·확산하는 역할 수행

4) 체험·공감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 강좌제목: 일상생활 민주주의
- 강좌대상: 일반인
- 강좌 진행 기간: 7주간(주당 2시간)
- 강좌 학습목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합의와 다수결) 체험, 자치활동, 대화를 통한 갈등 해결, 공식 및 비공식 회의진행, 마을공동체·학교·지역사회 등 의사결정 사례 학습, 합의 형성을 위한 회의진행 절차와 기법 체험 및 실습
- 강좌 개요

일상생활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갈등 당사자들 간 토론하고 대화를 통해 소통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갈등해결을 위한 합의 결정 과정에는 참여자들 모두 민주적이고 평등한 관계에 기초하여 참여해야 한다. 대화와 합의에 기반한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실제 참여하여 체험함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한다.

- 강좌 진행방식: 참여학습, 토의 및 토론학습, 프로젝트 학습 등을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 체험
- 강좌 주별 학습 주제

구분	학습 주제	참고 사항
1주	더불어 살아가기 (공동체)	
2주	자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	다수결, 만장일치, 합의방식 차이 학습
3주	1. 회의준비 및 시작	회의방식, 회의절차 및 규칙 설정
4주	2. 의제 논의	쟁점 논의, 안건 설정
5주	3. 쟁점 정리 및 문제 규명	문제 해결 탐색, 절차 적용
6주	4. 문제 해결 및 합의	그룹 별 모임, 갈등 당사자 대표회의 활용
7주	발표 및 토론	

5)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대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 강좌 제목: 글로벌 시대의 소프트 파워와 정치
- 강좌 대상: 대학생 및 대학 부설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 강좌 진행 기간: 7주간(주당 2시간)
- 강좌 학습목표: 정치 소프트 파워의 이해, 글로벌 시민성 함양, 의사소통 능력과 토론 방법 습득, 정치 리더십 함양
- 강좌 개요

21세기는 글로벌 시대이며 소프트 파워(soft power)의 시대이다. 우리도 이에 걸맞은 글로벌 경쟁력과 시민 의식, 생활정치의 이해, 소통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에 맞게 본 강좌는 글로벌 시대의 정치현상의 이해, 정치과정과 변화하는 국제정치환경, 글로벌 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소양을 갖추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세부적으로는 소프트 파워의 이해와 적용, 글로벌 시대의 정치와 선거 및 정당, 정치적 스펙트럼으로서 진보와 보수의 이해, 토론과 협상 방법 등에 관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도록 한다.

본 강좌는 기존의 강의방식을 탈피하여 학생들의 직접참여와 경험, 그리고 실습과 토론 등 참여자 중심의 기법을 활용한다.

- 강좌 진행방식: 이론 강의와 토론, 시청각 자료 시청과 토론, 역할게임과 전략게임
- 강좌 주별 학습 주제

구분	학습 주제	참고 사항
1주	글로벌 시대의 소프트 파워 및 세계시민성 지수 up↑	역할게임/토론
2주	한국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와 국가경쟁력	강의와 토론
3주	외국의 소프트 파워와 민주주의	시청각자료/토론
4주	글로벌 시대의 협력과 글로벌 거버넌스	전략게임/토론
5주	글로벌 시대의 정치적 태도의 스펙트럼	Pro&Contra
6주	글로벌 협상과 같이 살아가기	역할게임/토론
7주	글로벌 정치 소프트 파워(선거와 정당)	

6) 지방자치단체 지원 민간단체 민주시민교육 참여자 대상 프로그램

- 강좌 제목: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정치 산책
- 강좌 대상: 지자체 지원 민주시민교육 수강생
- 강좌 진행 기간: 7주간(주당 2시간)
- 강좌 학습목표: 인문학적 관점에서 민주주의 이론 이해, 시민으로서 높은 정치 소양 함양, 토론 방법과 의사소통 능력 향상, 아테네부터 현대 민주주의 이론과 정치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통찰력, 문제해결력 향상
- 강좌 개요

사회적 가치를 권위적으로 배분하는 과정이 정치라면 민주주의 정치과정과 정치현상에 대한 다면적 이해와 이론적 고찰이 요구된다. 현대 사회가 정치에 대한 불신이 높다는 측면에서 아테네 민주주의부터 현대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적 분석능력과 통찰력을 통해 시민의식과 민주정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

특히 21세기가 하드 파워(hard power)를 넘어 어떻게 하면 정치의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통해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접근도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을 넘어, 학습자 스스로 생활정치로서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자 중심의 학습방법을 접목해 볼 것이다.

이 강좌는 특히 민주정치의 네 가지 관점(통치 기술, 공적 업무, 타협과 합의, 권력과 자원배분)에 의거하여 주요학습 내용과 참여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방법론을 접목하여 다루게 된다.

- 강좌 진행방식: 이론 강의와 토론, 역할게임과 토론
- 강좌 주별 학습 계획

구분	학습 주제	참고 사항
1주	아테네에서 현대 민주주의로	
2주	정치적 태도의 스펙트럼: 진보와 보수	
3주	전체주의와 권위주의, 민주주의 무엇이 다른가?	
4주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과연 다른 것인가?	
5주	타협과 합의로서 민주정치	역할게임/토론
6주	다양한 세계의 선거제도와 정치참여	
7주	정당 쉽게 분류하기와 한국의 정당	

4. 강사양성방안

1) 법적 근거

평생교육원과 연계하여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 법령 검토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각급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강의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 법적 규정을 검토하는 데 목적을 둔다. 검토가 필요한 법들은 다음과 같다.

- 교육기본법 이하 평생교육법
- 각종 사회교육관련법률 (통일교육지원법, 법교육지원법 등)
- 각 지자체의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례 (ex.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 선거연수원훈령

이러한 기존 법령의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강사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문강사가 평생교육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전문강사 인증제를 마련하고, 자격증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선거연수원 규정 내에 다음의 내용을 포함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 예시: 교육 지원법 및 훈령 내용

(가칭) 민주시민교육 지원법

제 _ 조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양성) 담당기관은 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 그 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훈령

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 운영규정

제 _ 조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란 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 _ 조 (교육과정의 개설) 교육목적, 대상 등을 감안하여 민주시민교육 전문과정을 분야별로 나누어 개설할 수 있다.

제 _ 조 (선발조건)

제 _ 조 (과정운영)

제 _ 조 (수료시험)

제 _ 조 (과정수료증 수여)

제 _ 조 (기획·평가위원회 구성)

제 _ 조 (전문강사 관리 및 지원)

2) 내용 및 방식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및 교육 방식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목표는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가 참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표 5-1>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교육 내용

1단계: 기본과정	민주주의 기본 원리 민주주의 역사 민주주의 가치 시민의 권리
2단계: 전문과정	정치제도 정치정당, 선거, 국가, 시민사회
3단계: 강의력 향상과정	교수법, 강의기법
4단계: 실천과정	강의시연 및 피드백, 코칭

민주시민교육 강사를 양성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전문성을 증명할 수 있는 교과목 개설
- 대상자 자격
- 수료 기준
- 교육과정 기간 및 장소
- 비용
- 인원

또한 강사 활용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전문강사를 양성한 이후 관리 및 지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수요가 있는 곳에 강사를 파견하여 소규모 그룹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만약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면, 이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도 있다.²⁷⁾

27) 현재 광주 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시민활동가 양성사업’을 통해 양성된 시민활동가를 지역주민들의 모임이나 지역 단체에 파견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광주시민교육’이 시행 중이다.

- 예시: 전문강사 파견 방안

(가칭) 찾아가는 민주시민교육

- 개요: 시민의 수요가 있는 경우, 전문강사를 파견하여 민주주의 교육 확산에 기여함.
- 교육대상: 시민 누구나 (5인 이상 모임, 동아리)
- 교육장소: 신청기관 강의실, 회의실, 모임장소, 시립도서관, 주민자치센터 등
- 교육내용: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갈등해결절차, 민주주의 시민교실 등
- 교육방법: 기관별 희망하는 주제별 강의 신청 시 전문강사 파견
- 신청접수: 각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

양성된 강사를 활용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도 고려해야 한다.

- 전문강사 관리대장 작성 및 유지
-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련기관 강사정보 제공
- 강사활동 경비 지원
- 재교육 기회 제공

3) 추진방안 및 과정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민주시민교육 관련하여 협력하는 경우, 협약을 체결한 평생교육기관에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전문강사로 하여금 강의하도록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미 선거연수원에는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 심화과정이 설치되어 있으며, 매년 200명 정도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또한 봉사단 등 민주시민교육 양성과정을 이수한 인력 및 전문가들을 평생교육기관의 민주시민교육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각 전문분야별로 인력풀을 만들어 수요가 있는 기관에 파견하는 방안이다. 전문분야란 선거전문가, 정당전문가, 국가 및 정부전문가, 시민사회전문가, 민주주의 전문가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수요가 있는 소규모의 단체, 모임 등에 강사를 파견하는 방안이다. 평생교육진흥원 등에서 신청을 통해 수요자를 모집한 후 수요자가 원하는 주제를 강의할 수 있는 강사를 파견하는 것이다. 이는 5인 정도의 소규모 모임을 목표층으로 한다. 이 방안은 풀뿌리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넷째,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이다. 국가 자격증

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 전문강사를 파견하거나 공유하는 경우,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자격증 단계를 1급, 2급, 3급 등으로 분류하여, 기존의 평생교육사나 선거연수원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의 경우에는 3급의 시험을 건너뛰는 방안 등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강사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을 지닌다.

<표 5-2>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양성 추진단계

제 1 단계	수요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생교육기관 수요 검토 • 인적자원 검토
제 2 단계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주체기관 설정 • 관련 법 체계 정비 • 인프라 구축
제 3 단계	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관위-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 협약체결 • 강의 콘텐츠, 프로그램, 인적자원 등 공유 합의
제 4 단계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양성과정 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과정 단계 설정(기본-전문-심화) • 내용 및 방식 • 커리큘럼 • 시수
제 5 단계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인증 및 위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료시험 및 기준 설정 • 수료증 수여 • 평가위원회
제 6 단계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관리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위촉 절차 • 관리대장 작성 유지 •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기타 활성화 방안

1) 단기과제

(1) 평생교육연계 민주시민교육 포털사이트 설치 및 운영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기관·단체들 사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서로 상이한 교육초점과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고, 기본적인 정보 공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정보공유 부족은 정부가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보다 시민사회단체나 원격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기관에서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생교육정보망으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주도하에 구축되어 있는 평생교육정보망을 들 수 있지만, 기타 평생교육기관 간의 정보망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 목적

- 평생교육단체 및 참여자들이 평생교육차원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구축

□ 과제 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국내외 현황,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에서 실시하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정보 등을 웹상에서 볼 수 있도록 하여 평생교육차원의 민주시민교육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는 홈페이지 운영
- 일반 국민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확대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 민간 평생교육기관 담당자 등도 다른 평생교육기관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해외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 방식

□ 추진 방식

-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 또는 산하 유관 기관에서 사업을 발주하여 홈페이지를 개발하고 운영

(2)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협의체 구성

평생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은 개별적·단편적·제한적 수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정치체계의 안정성, 효율성, 통합성을 제고시켜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논의할 협의체가 부족한 실정이다.

□ 목적

- 평생교육 차원의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위해서 선거연수원이 주무부서가 되어 관련성 높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과제 내용

-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협의체 중장기 로드맵 및 운영방안 마련
-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 공유, 공동사업 운영

□ 추진 방식

- 선거연수원장과 평생교육 단체의 기관장급의 범민주시민교육협의체 구성 및 과장급(시민교육부 또는 제도연구부) 실무협의체 구성
- 향후 전담부서를 통한 전국차원의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통합 운영

(3)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운영 가이드 제공 및 교수방법

□ 목적

- 평생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있는 운영 가이드 제공
-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 교수방법 적용을 위한 우수프로그램 제공

□ 과제 내용

- 평생교육 전반에서 민주시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토론, 역할극 등을 적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가이드
- 토론이나 역할극의 교과적용을 위한 우수사례 제공 및 학교 방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 방식

- 선거연수원 홈페이지 및 이 연구에서 제안한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포털사이트’를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우수사례집 개발 및 보급
- 지역사회자원을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선거연수원 평생교육시설 유형 변경

평생교육시설 분류에 의하면 선거연수원의 평생교육은 제4유형 직능단체의 특별연수기관에 속하며 복합 평생교육시설(제2유형)로 전환하는 것이 1차 선결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체결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법상 복합 평생교육시설로 인정받는 부분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상의 민주시민교육을 평생교육적 차원으로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 목적

- 선거연수원 평생교육 시설 제2유형으로 인증 또는 전환

과제내용

- 평생교육 시설 분류에 의하면 선거연수원의 평생교육은 제4유형 직능단체의 특별연수기관에 속함으로 이를 복합 평생교육시설(제2유형)로 전환

추진 방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협력체결 등을 통해서 평생교육법상 복합 평생교육시설로 인정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법상의 민주시민교육을 평생교육적 차원으로 규정하여 자체 인정

2) 중장기과제

(1) 학점인정 민주시민교육 교과목 개발

목적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하는 학점인증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과목 개발
- 학점인증 과목의 수업 진행을 위한 교재 개발

과제 내용

- 학점인증을 위해서 민주시민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취합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과목 개발
- 민주시민교육 교재 개발 및 보급

추진 방식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또는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 지자체(서울시(평생교육담당관실),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한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교재의 공동 개발

(2) '민주시민교육지원법(가칭)' 제정

목적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평생교육과의 연계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과제 내용

- 민주시민교육협의체를 통한 지원법 합의에 의거하여 '민주시민교육지원법(가칭)' 국회 입법

□ 추진 방식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민주시민교육협의체가 공동으로 ‘민주시민교육지원법(가칭)’ 초안 마련
- 마련된 법안을 가지고 법안의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각계의 의견 수렴 및 공감대 형성
- 국회 여야 공동발의를 통한 법안 제정

VI. 종합 및 협력방안

본 연구는 평생교육기관·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선관위가 상호 협력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의 안정성과 효과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평생교육기관·단체의 현황 분석을 통해 현주소를 확인하고, 민주시민교육의 핵심 주체인 선관위(선거연수원)의 현황 및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를 기반으로 이들 기관이 지니고 있는 인프라와 자원을 확인한 후 평생교육시스템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 평생교육의 체계와 제도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평생교육기관·단체는 다양한 명칭과 형태의 프로그램을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주체들 사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공동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서로 상이한 교육초점과 교육내용을 다루고 있고, 심지어 기본적인 정보 공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서 평생교육기관이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시민교육은 개별적·단편적·제한적 수준과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증명하듯,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양적공급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내용 영역별로는 시민참여교육, 학력보완교육(초·중등), 문해교육은 급격한 감소추세에 있었으며, 직업능력, 문화예술, 인문교양, 학점인정 프로그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평생교육체계에 있어, 시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정치체계의 안정성, 효율성, 통합성을 제고시켜줄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반해서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할 연계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평생교육은 국가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각 시·도 단위, 대학교, 민간단체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생교육기관·단체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국가 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기회의 확대와 활성화, 평생교육정보의 개방·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을 목적으로 인터넷 정보망을 구축하고, 지역 내의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대학이 지니는 높은 신뢰와 교육적 명성을 바탕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위 기관들 모두 시민의식 함양과 정치참여와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그나마 시민단체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최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을 기반으로 서울시에서 활발하게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연수원을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전문 교육체계를 갖추고 있다. 선관위는 민주시민교육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는 점에서 기존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에 용이하며, 만약 선관위가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민주시민교육 부문에서 강점을 지닐 수 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으로서 중립성을 지니고, 시·도 선관위를 비롯하여 전국적 체계를 구축하였다. 선거연수원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면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저변을 확대하는 등 민주시민교육 인프라를 이미 갖추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특히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을 통해 그 동안 민주시민교육의 자격을 지닌 강사를 다수 배출하였을뿐만 아니라 다양한 강의내용 및 방식에 대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기관과 연계 및 협력에 강점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에 있어 각 교육 담당 기관들 간 교육내용 및 방법에 대한 공유와 활용, 네트워크 구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 국민이 참여 가능한 민주시민교육체계 및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과정의 내용 및 방식이 부족하여 강사 전문성 및 활용 측면에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평생교육기관·단체의 현황, 교육내용 및 교육체계를 살펴볼 때, 선관위는 다음과 같이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다.

첫째, 평생교육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선관위의 역할이 도출된다. 평생교육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규모는 매우 저조할 뿐만 아니라, 시민참여 영역에 교양·취미·봉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개설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관위는 단순한 시민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시민참여 교육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민주시민교육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기준을 제시하고, 그 내용을 개발하여 확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데에 있어 강사 섭외의 어려움, 대중적이지 않은 주제 등에 대한 폐강의 우려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러한 측면에서 협력 및 지원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지역사회교육협회의 경우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구성과 강사 수급의 어려움 보다는 프로그램의 개설과 운영에 있어서의 재정적 어려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 측면이 고려된 연계 방안과 동등한 파트너 주체로의 역할 정립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활발한 민주시민교육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추세에 따라, 자치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한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확대와 활성화 방안의 모색이 가능하다.

둘째, 평생교육기관·단체와 선관위 간 다양한 층위 및 단위에서 협력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즉 선관위는 중앙 단위 기관 및 단체, 시·도 단위 기관 및 단체,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민주시민교육 전문 시민단체와 협력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 협력체계 구축은 법적 체계 검토 및 법적 근거 마련, 업무협약 체결, 각 기관 간 역할

분담, 실행의 단계로 이루어질 수 있다. 선관위가 각 단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각각의 장점과 한계가 공존하므로 이를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선관위가 중앙 단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교육부와 공동으로 각종 관련 법령을 검토함으로써 법·제도 정비를 통해 연계들을 설정하고, 민주시민교육 개발주체와 운영주체를 구분하는 등의 핵심 역할을 분담하고, 이하 산하 주무부처 간 세부 역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시·도 단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때, 각 지역에 적합한 조례 등의 법적 근거를 검토하고, 기능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각 기관 담당부서 간 역할분담을 고려해야 한다. 대학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교육 프로그램 공동개발 및 강좌개설, 전문 강사 공동활용 및 자료 교환, 전문강사 양성과정, 학위과정, 온라인 강의 공동개발 등에 대한 체계 및 내용에 있어 협력하면서, 각 조직의 부서 간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 민간단체와 협력하는 경우에도 전문강사 과정, 민간단체 네트워크 활용, 역할 분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공유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선관위와 평생교육 기관·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중 일부 차이를 상호 교환하는 방안, 사전교육 제도 구축을 포함한 사전교육체제 활성화 방안도 제시될 수 있다.

셋째, 평생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시민주도형 참여식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평생교육단체의 관계자들과의 조사에서 나타났듯이,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 학습자의 수요부족(대중성 미비), 적절한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 등으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기관과의 프로그램 공동개발 등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며, 교양수준으로 단기로 개설하는 경우, 인문학 수업의 형태로 수강료 없이 개설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할 것이다.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연계와 확대를 위해서는 선관위가 먼저 이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네트워크 구축 등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연구진은 ‘시민주도형 민주시민교육 학습동아리 지원 및 운영’, ‘시민주도 민주시민교육 학습프로그램 공모 사업’, 지역사회 환경 및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제공할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퍼실리테이터’ 등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평생교육의 수요와 프로그램 환경을 고려하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서울과 경기도 등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통해 민주시민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수요에 적합한 3개의 참여식과 체험·공감형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일상생활 민주주의’, ‘글로벌 시대의 소프트 파워와 정치’, ‘아테네의 민주주의와 정치 산책’을 개발하였다.

넷째,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이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존 법령 검토를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선거연수원 관련 법규나 규정에 전문강사 양성 및 전문과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

다.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강사양성 과정의 내용 및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전문성을 인증할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고, 전문가 인증 과정을 구축하면서, 수료기준, 비용, 인원 등을 결정해야 한다. 또한 양성된 강사의 활용에 있어 강사양성 이후 관리 및 지원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평생교육기관 및 단체와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협력하는 경우, 기존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를 활용하는 방안, 전문 분야별로 인력풀을 구축하여 수요가 있는 기관에 파견하는 방안, 소규모 모임에 강사를 파견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선관위의 민주시민교육 전문강사 인증제를 도입하고, 전문강사 인증 및 자격증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공신력 있는 자격증 발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타 활성화 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평생교육연계 민주시민교육 포털사이트 설치 및 운영’,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협의체 구성’, ‘평생교육 민주시민교육 운영 가이드 제공 및 교수방법’, ‘선거연수원 평생교육시설 유형 변경’이, 중장기적으로는 ‘학점인정 민주시민교육 교과목 개발’, ‘민주시민교육지원법(가칭) 제정’이 뒤따라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대현(2001). 한국 시민사회의 성장과정에 대한 분석과 시민교육적 함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영혜 외(2011).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편(2014). 창의적인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201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 활용 워크숍 자료집.
- 교육부(2015).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세종: 교육부
- 교육부·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4). 2013 평생교육백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3). 2013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15). 2015 평생교육통계자료집.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5).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16). 지역 평생교육 추진체제 구축 현황.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권두승(2002). “지역사회교육운동이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친 영향과 성과.” 평생학습실현: 지역사회교육. 서울: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 김영태(2006). “민주시민교육으로서 당원교육의 중요성과 전략.”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편,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참여중심의 민주시민교육,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pp. 25-42.
- 김원태 외(2006). 주요 외국 학교시민교육 내용 연구.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노경란·박상옥·엄보현·이은경·장환영·현영섭(2012). 고등교육 환경변화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의 발전 방향 탐색. 평생교육진흥원
- 류경숙·윤여각·이종섭·이희수·최돈민(1999). 평생교육 요구분석. 한국교육개발원.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사업국(2011). 민주적 의사결정과 의사소통. 서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박윤경·이승연(2015). “초중고 학생들의 정치사회적 이슈 및 이슈토론 관련 인식조사: 학교시민교육에의 시사점.” 시민교육연구. 47(2), pp. 53-84.
- 변종현(2003). “정보사회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체계론적 접근.” 국민윤리연구. 제54호.
- 서울특별시교육청(2015). 2015학년도 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 2015년 2월.
- 서현진(2005). “선거와 민주시민교육의 실태분석: 고등학교 사회 및 정치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37(4), pp. 73-94.
- 선거연수원(2014). 민주시민교육의 이해. 서울: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

- 선거연수원(2015). 민주시민교육 기초자료 연구결과 보고서. 서울: 선거연수원 시민교육부
- 선거연수원(2016). 2016년도 교육 연수계획. 서울: 선거연수원 교수기획부.
- 송혜영(201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학습자 지원체제 구축방안. 동덕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신두철(2004).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 한국민주시민 교육론. 엠-에드.
- 신두철(2010a). “시민교육과 정치참여에 대한 고찰.” 한국시민윤리학회보. 제22집2호, pp. 57-73.
- 신두철(2010b). “한국 국가기관의 민주시민교육 실태와 제도화.” 2010년 한국민주시민교육공동세미나 자료집.
- 신두철(2011a). “독일과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정치적 의미: 투표 참여와 정당지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8권1호, pp. 57-73.
- 신두철(2011b). “독일정치교육의 새로운 도전과제로서 정치협오와 정치참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권제4호, pp. 27-48.
- 신두철·허영식(2008). 민주시민교육의 정석. 서울: 오름.
- 신두철·허영식(2009). 민주시민교육 핸드북Ⅱ: 방법론. 서울: 오름.
- 아주경제(2016). 세종시, 평생교육진흥원 4월 출범. 입력일: 2016.03.24. (검색일: 2016.06.11.)
- 염경미 외(2014).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사용 지도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 오동석 외(2014). 학교 민주주의 구조화를 위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 경기도교육청 연구보고서.
- 오혜연·윤정은·이희수·정종호·조순옥·최운실(2005). 평생교육 정책 공과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상목(2007). 민주화와 한국 민주시민교육의 발전. 박재창, B.J.젤리거 공편, 민주시민교육의 전략과 과제. 서울: 오름.
- 이한규(2011). “한국과 독일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민주시민교육: 비판적 사고 모델.” 한독사회과학논총. 21(4), pp. 3-26.
- 장동진(2005). “한국 민주정치와 민주시민교육: 적극적 시민육성을 위한 자유주의적 논의.” 사회과학논집. 제36호.
- 장은주 외(2014). 왜 그리고 어떤 민주시민교육인가? - 한국형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이론적 기초에 대한 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 보고서.
- 정창화(2005).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착근방안 - 민주시민교육기관의 체제구축 및 조직설계를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제10호.

- 천희완(2005). 민주시민교육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조사 연구: 교사를 중심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충남대 산학협력단(2011). 각국의 민주시민교육제도 및 관련법안 연구. 중앙선관위 외부용역 보고서.
- 한승희(2004). 평생교육론. 서울: 학지사.
- 한승희·양은아·이재열(2011).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급패턴 분석.” 평생교육학 연구. 17권4호, pp. 83-119.
- 허영식(2001). 현대사회의 변동과 시민교육. 서울: 원미사.
- 허영식(2004). “사회변동에 대비한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와 발전방안: 생활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보. 9, pp. 23-55.
- 허영식(2009). 세계위험사회와 미래워크숍. 서울: 강현출판사.
- 허영식(201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아태연구. 제18권1호.
- L. E. 래쓰, M. 하아민, S. B. 싸이몬 공저, 정선심, 조성민 공역(1994).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치명료화의 이론과 교수전략. 서울: 철학과 현실사. pp 149-163.
- MBN뉴스(2016). “‘한국 민주주의 세계 22위 ‘완전한->미흡한’ 민주주의로 밀려나’...1위 국가는?” (2016년1월22일자). 검색일: 2016.3.12.

- Berry, J., K. Portney and K. Thompson. 1993. *The Rebirth of Urban Democracy*. Washington DC: Brookings Institution.
- Detjen, J. 2007. Politische Bildung. Geschichte und Gegenwart in deutschland, Munchen/Wien:222.
- Deucher, R. 2007. *Citizenship, Enterprise and Learning*. Trentham Books.
- Diamond, Larry, Marc F. Plattner, Yun-han Chu, and Hung-mao Tien. eds. 1997. *Consolidating the Third Wave Democracies: Theme and Perspectives*.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Press.
- Habermas, Jurgen. 1991.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Public Sphere: An Inquiry into a Category of Bourgeois Society*. Translated by Thomas Burger with the Assistance of Frederick Lawrence, Cambridge: The MIT Press.
- Kerr, D. 2000. Citizenship Education: An International Comparison. in D. Lawton, J. Cairns and R. Gardner eds. *Education for Citizenship*. London and New York: Continuum.
- Korte, K-R. 2007. Wahlen, politische Partizipation und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2007 Koreanisch-Deutsches Symposium fur politische Bildung*:

pp. 27–50.

- Rawls, John. 1996. *Political Liberalis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Rawls, John. 2001. *Justice as Fairness: A Restatement*. Edited by Erin Kell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 Sander, W. 2004. *Politik in der Schule*. Kleine Geschichte der politischen Bildung in Deutschland. Marburg.
- Shafir, Gershon, ed. 1998. *The Citizenship Debates: A Reader*.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idmaier, Benedikt. 2009. Politikverdrossenheit und Partizipation: Zwei zentrale Herausforderungen für die Politische Bildung in Deutschland. 2009 *Koreanisch–Deutsches Symposium für politische Bildung*: pp. 11–40, 2009
- Woolever, Roberta M. & Scott, Kathryn P. 1988. *Active Learning In social Studies : Promoting Cognitive and Social Growth*. Glenview: Scott, Foresman and Company.

부록1. 2015년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기관 현황

(기준일: 2015.05.01)

연번	시도	기관명	비고
1	서울	가톨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성의)	
2	서울	감리교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	서울	개신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4	서울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5	서울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서울)	
6	서울	경희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7	서울	경희사이버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8	서울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	
9	서울	광운대학교 정보과학교육원	
10	서울	국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1	서울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12	서울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3	서울	국제예술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14	서울	그리스도대학교 평생교육원	
15	서울	덕성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6	서울	동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서울)	
17	서울	동덕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8	서울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9	서울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0	서울	명지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21	서울	명지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2	서울	배화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3	서울	백석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서울)	
24	서울	백석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5	서울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6	서울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평생전문가교육원	
27	서울	삼육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28	서울	삼육보건대학교 평생교육원	
29	서울	상명대학교 평생교육원(서울)	
30	서울	서강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31	서울	서경대학교 부설 예술종합평생교육원	
32	서울	서우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3	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4	서울	서울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5	서울	서울기독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36	서울	서울대학교평생교육원	
37	서울	서울디지털대학교 부설 미래평생교육원	
38	서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9	서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40	서울	서울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41	서울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42	서울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43	서울	서울여자간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44	서울	서울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45	서울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46	서울	서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47	서울	성공회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48	서울	성신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49	서울	세종대학교 부설 글로벌지식평생교육원	
50	서울	세종사이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51	서울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52	서울	순복음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53	서울	송실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54	서울	송의여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55	서울	연세대학교 평생교육원	
56	서울	예일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57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58	서울	인덕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센터	
59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60	서울	정화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61	서울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서울)	
62	서울	총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63	서울	추계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64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65	서울	한국상담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상담학아카데미	
66	서울	한국성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67	서울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서울평생교육원	
68	서울	한국체육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	
69	서울	한독미디어대학원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70	서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71	서울	한반도국제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72	서울	한성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73	서울	한신대학교 서울 평생교육원	
74	서울	한양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75	서울	한양사이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76	서울	한양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77	서울	한영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78	서울	홍익대학교 부설 문화예술평생교육원	
79	서울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80	부산	경남정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81	부산	경성대학교 평생교육원	
82	부산	고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83	부산	대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84	부산	동명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85	부산	동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86	부산	동서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87	부산	동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88	부산	동의과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89	부산	동의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90	부산	동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91	부산	부경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92	부산	부산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93	부산	부산경상대학교 사회교육원	
94	부산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95	부산	부산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96	부산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	
97	부산	부산디지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98	부산	부산여자대학교 사회교육원	
99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00	부산	신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01	부산	한국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102	부산	화신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103	대구	경북과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04	대구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05	대구	계명대학교 평생교육원	
106	대구	계명문화대학교 평생교육원	
107	대구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08	대구	대구공업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09	대구	대구과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10	대구	대구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11	대구	대구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12	대구	수성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13	대구	영남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114	대구	영남이공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15	대구	영진전문대학 부설평생교육원	
116	대구	한국폴리텍VI대학 산학협력단	
117	인천	가천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메디컬 캠퍼스)	
118	인천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인천캠퍼스)	
119	인천	경인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20	인천	성산효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21	인천	인천가톨릭대학교 부설 문화예술교육원	
122	인천	인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23	인천	인천재능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24	인천	인하공업전문대학 부속 평생교육원	
125	인천	인하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26	인천	주안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27	인천	한국폴리텍대학 인천캠퍼스 부설평생교육원	
128	광주	고구려대학교 광주 평생교육원	
129	광주	광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30	광주	광주교육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131	광주	광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32	광주	광주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33	광주	광주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34	광주	기독교간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35	광주	남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36	광주	동강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37	광주	서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38	광주	송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39	광주	전남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140	광주	조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41	광주	조선이공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42	광주	한국폴리텍V대학 광주캠퍼스	
143	광주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144	광주	호남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45	대전	건신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146	대전	대덕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47	대전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48	대전	대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본교)	
149	대전	대전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50	대전	대전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51	대전	목원대학교 미래창의교육원	
152	대전	배재대학교 평생교육원	
153	대전	우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54	대전	을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대전)	
155	대전	충남대학교 평생교육원	
156	대전	침례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57	대전	한국폴리텍IV대학 부설 평생능력개발원 탄방분원	
158	대전	한남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59	대전	한밭대학교 평생교육원	
160	울산	울산과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61	울산	울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62	울산	춘해보건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	
163	울산	한국폴리텍VII대학 울산캠퍼스	
164	세종	대전가톨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65	세종	한국영상대학교 평생교육원	
166	세종	홍익대학교 부설 세종캠퍼스 평생교육원	
167	경기	가천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글로벌 캠퍼스)	
168	경기	가톨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성심)	
169	경기	강남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70	경기	경기과학기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71	경기	경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72	경기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73	경기	경인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경기캠퍼스)	
174	경기	경희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75	경기	계원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176	경기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77	경기	국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78	경기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179	경기	국제사이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80	경기	김포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81	경기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평생교육원	
182	경기	대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83	경기	대진대학교 평생교육원	
184	경기	대학부설 수원캠퍼스 평생교육원	
185	경기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186	경기	동남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87	경기	동서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88	경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평생교육원	
189	경기	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90	경기	두원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	
191	경기	루터대학교 평생교육원	
192	경기	명지대학교 자연캠퍼스 부설 사회교육원	
193	경기	부천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194	경기	서영대학교 부설 미래평생교육원	
195	경기	서울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96	경기	서울예술대학교 부설 문화예술교육원	
197	경기	서울장신대학교 평생교육원	
198	경기	서정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199	경기	성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00	경기	세계사이버대학 평생교육원	
201	경기	수원가톨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02	경기	수원과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03	경기	수원대학교 사회교육원	
204	경기	수원여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05	경기	신구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06	경기	신안산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207	경기	신한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	
208	경기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09	경기	아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10	경기	안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11	경기	안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12	경기	여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13	경기	연성대학교 평생교육원	
214	경기	열린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215	경기	오산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16	경기	용인대학교 평생교육원	
217	경기	용인송담대학교 평생교육원	
218	경기	웅지세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19	경기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20	경기	유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21	경기	을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성남)	
222	경기	장안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23	경기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안성)	
224	경기	중앙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25	경기	청강문화산업대학교 평생교육원	
226	경기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27	경기	총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양지)	
228	경기	칼빈대학교 평생교육원	
229	경기	평택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30	경기	한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31	경기	한국관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32	경기	한국복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33	경기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34	경기	한국외국어대학교 부속 국제사회교육원	
235	경기	한국항공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236	경기	한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37	경기	한신대학교 오산 평생교육원	
238	경기	한양대학교 ERICA사회교육원	
239	경기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평생교육원	
240	경기	협성대학교 평생교육원	
241	강원	가톨릭관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42	강원	강릉영동대학교 평생교육원	
243	강원	강릉원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44	강원	강릉원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원주)	
245	강원	강원관광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246	강원	강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47	강원	강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삼척)	
248	강원	강원도립대학 평생교육센터	
249	강원	경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50	강원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원	
251	강원	상지영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52	강원	세경대학교 사회교육원	
253	강원	송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54	강원	송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55	강원	연세대학교 사회교육개발원	
256	강원	춘천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57	강원	한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58	강원	한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59	강원	한림성심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60	강원	한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61	충북	강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62	충북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글로벌캠퍼스)	
263	충북	극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64	충북	대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65	충북	서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66	충북	세명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67	충북	영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68	충북	중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69	충북	청주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70	충북	청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71	충북	충북대학교 평생교육원	
272	충북	충북도립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73	충북	충북보건과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74	충북	충청대학교 평생교육원	
275	충북	한국교통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76	충남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	
277	충남	공주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78	충남	공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79	충남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280	충남	글로벌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281	충남	금강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82	충남	나사렛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83	충남	남서울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284	충남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부설 평생교육원	
285	충남	백석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천안)	
286	충남	백석문화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87	충남	상명대학교 평생교육원(천안)	
288	충남	선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89	충남	순천향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90	충남	순천향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천안)	
291	충남	신성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92	충남	중부대학교 평생교육원	
293	충남	천안연암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294	충남	청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95	충남	충남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296	충남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97	충남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98	충남	한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299	충남	혜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00	충남	호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01	전북	군산간호대학교 평생교육원	
302	전북	군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03	전북	군장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04	전북	서남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05	전북	서해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306	전북	예수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07	전북	예원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08	전북	우석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09	전북	원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10	전북	원광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원	
311	전북	원광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12	전북	전북과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13	전북	전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14	전북	전주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15	전북	전주기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316	전북	전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17	전북	전주비전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18	전북	한국농수산대학 평생교육원	
319	전북	한일장신대학교 부설 기독교평생교육원	
320	전북	호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21	전남	고구려대학교 평생교육원	
322	전남	고구려대학교 해남 평생교육원	
323	전남	광양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24	전남	동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25	전남	동아인재대학교 평생교육원	
326	전남	목포가톨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27	전남	목포과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28	전남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329	전남	목포해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30	전남	세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31	전남	순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32	전남	순천제일대학교 평생교육원	
333	전남	영산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34	전남	전남과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35	전남	전남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여수)	
336	전남	청암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37	전남	초당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38	전남	한국폴리텍V대학 목포캠퍼스	
339	전남	한려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40	전남	한영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341	경북	가톨릭상지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42	경북	경북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분원	
343	경북	경북도립대학교 평생교육원	
344	경북	경북전문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45	경북	경안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46	경북	경운대학교 평생교육원	

347	경북	경일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348	경북	경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49	경북	구미대학교 평생교육원	
350	경북	금오공과대학교 평생교육원	
351	경북	김천과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52	경북	김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53	경북	대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54	경북	대구가톨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경주분원	
355	경북	대구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56	경북	대구미래대학교 평생교육원	
357	경북	대구사이버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	
358	경북	대구예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59	경북	대구외국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60	경북	대구한의대학교 평생교육원	
361	경북	대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62	경북	동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경주)	
363	경북	동양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64	경북	문경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65	경북	서라벌대학교 평생교육원	
366	경북	선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67	경북	성덕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68	경북	안동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	
369	경북	안동대학교 평생교육원	
370	경북	영남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원	
371	경북	영남신학대학교 평생교육원	
372	경북	영남외국어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373	경북	영진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칠곡)	
374	경북	위덕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75	경북	포항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76	경북	한국복지사이버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377	경북	한동대학교 부속 평생교육원	
378	경북	호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79	경남	가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80	경남	거제대학교 고현 평생교육원	
381	경남	경남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382	경남	경남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83	경남	경남도립거창대학 평생교육원	
384	경남	경남도립남해대학 평생교육원	
385	경남	경상대학교 평생교육원	
386	경남	김해대학교 평생교육원	
387	경남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	
388	경남	마산대학교 평생교육원	
389	경남	부산장신대학교 평생교육원	
390	경남	영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91	경남	인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92	경남	진주교육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93	경남	진주보건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94	경남	창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95	경남	창원대학교 평생교육원	
396	경남	창원문성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397	경남	한국국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98	경남	한국승강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399	경남	한국폴리텍Ⅶ대학 창원캠퍼스 부설 평생교육원	
400	제주	제주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	
401	제주	제주국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402	제주	제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403	제주	제주한라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출처: 교육부(2015)

부록2.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의 민주시민교육 강의 사례

우석대 평생교육원의 특별교육과정으로 개설된 ‘헌법과 민주시민교육’ 강좌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WOOSUK UNIVERSITY

평생교육원소개 | 모집안내 | 교육과정 | 학점은행·독학학위 | 게시판

평생교육원 소개: 열린교육! 배움의 기쁨!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WOOSUK LIFE EDUCATION CENTER

- 민간자격교육
- 교양교육
- 예술교육
- 건강교육
- 국가공인자격교육
- 특별교육과정**
- 민간자격관리안내
- 기업재난관리자교육
- 전원캠퍼스

특별교육과정 HOME > 교육과정 > 특별교육과정

헌법과 민주시민교육 수강신청 | 이전으로

등록된 사진이 없습니다.	교수명		
	전문강사		
과목분류	헌법과 민주시민교육	수업시간 (강의설명)	아간 - 목 19:00-21:00 (외부강의)
시수	26시간	정원	30명
교육비(원)	300,000원	교육기간	16/ 06/ 27~16/ 08/ 20(13주)
교육목표 및 개요	헌법·평등인권 등을 주제로 평소 딱딱하게 다가왔던 주제를 누구라도 재미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하였으며 13인의 국내 저명 인사들로 강사진을 구성하였고 기수별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인맥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교육방법			
교재 및 참고문헌			
교육내용 (강의계획서)	1주차 강경선 교수 실천적 헌법을 위하여 2주차 윤현식 교수 민주시민과 정치참여 3주차 송기춘 교수 선거제도의 이해 4주차 신숙주 교수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5주차 노진석 교수 경제민주화란 무엇인가? 6주차 오길영 교수 정보인권의 중요성 7주차 임재성 교수 평화롭게 살 권리 8주차 홍정훈 교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9주차 오동석 교수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10주차 박숙경 교수 장애인의 인권 11주차 이계수 교수 지속가능한 삶과 환경권 12주차 권혜령 교수 혐오표현 어떻게 볼 것인가? 13주차 락노현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과제와 전망		
기타			

출처: 우석대학교 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wscyberstudy.woosuk.ac.kr>)

부록3. 서울시민대학의 시민교육 강좌 사례

서울시민대학 동국대 시민교육론/시민정치론/시민실천론 강좌계획서

1. 강좌1 : [시민교육론] “좋은 시민이 좋은 민주주의를 만든다.” — 시민능력

□ 강의 일시 : 2016년 3월 28일~6월 13일. 시간 : 매주 월요일 19:00 - 21:00

□ 강의 장소 : 동국대학교 신공학관5147(401-5147)

□ 참여 인원 : 20~40명

□ 학습목표

· 민주시민교육의 정체성과 원리 그리고 그 실태를 이해함으로써 민주시민교육사의 기본 자질을 함양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 운용법을 체득하여 민주주의 의식을 공고히 하고, 현실정치에 대한 정치적 문해력(political literacy)을 함양하며, 민주정치에의 참여를 위한 시민적 실천능력과 권능을 제고한다.

□ 학습개요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론(개념, 역사, 이론, 실태, 체계와 내용)과 그 운용론(조직과 방법)을 학습한다.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고 꾸려갈 ‘좋은 시민’(good citizen)이 민주주의 정치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그 좋은 시민은 현실 정치의 운동과 실시간으로 병행하여 평생에 걸쳐 지속되는 (민주)시민교육에 의해 정치현안에 대해 고품질의 의견과 판단을 제출할 줄 알게끔 훈련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 세부일정표

회차	진행일	주 제	강의명	강사명(이력)
1차. 민주시민교육 기본론 (개념, 역사, 이론, 실태, 기획)				
1	03/28	유능한 주권자로서 좋은 시민	좋은 시민 없는 좋은 민주주의는 없다. - 민주주의, 민주시민,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법적 근거 - 정치교육, 시민교육, 시민성 교육, 공민교육 등	홍윤기 총괄 진행 (경우에 따라 관련자 초빙)
2	04/04	역사/사례	민주시민교육의 역사 (연원, 미국과 유럽의 사례)	
3	04/11	교육원칙	민주시민교육의 작동(주체, 영역, 내용)과 작동 원리 - 보이텔스바흐 합의	
4	04/18	체계와 기능	한국형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와 기능 : 민주시민성의 요건 (시민지식, 시민가치, 시민기능, 시민실천)	

5	04/25	기획/조직	현장 민주시민교육의 기획과 조직 (주제 선택, 교육방식 결정, 교육참여자 선정, 홍보 및 참여자 모집, 결과 기술과 평가, 사후 관리)	
2차. 민주시민교육 운영론 : 시민적 이성과 감성의 발현				
6	05/09	의사표현	비판적 사고와 정치적 글쓰기	총괄자+강사
7	05/16	의사소통	정치적 의사소통 (발제, 대담, 연설, 토론 등)	총괄자+강사
8	05/23	의사합의	회의법과 소모임 운영	총괄자+강사
9	05/30	문화매체	문화를 통한 정치 (문자매체, 영상매체, 음향매체 등)	총괄자+강사
10	06/13	뉴미디어	디지털 매체의 진화와 민주주의 (SNS, 웹 2.0에서 웹4.0까지)	

2. 강좌2 : [시민정치론] “내 나라의 주인 되기” — 헌법을 만든 주권자, 시민가치, 시민지식

- 강의 일시: 2016년 3월 30일 ~ 6월 15일. 시간 : 매주 수요일 18:00 -20:00
- 강의 장소: 동국대학교 신공학관5147 (401-5147)
- 참여 인원: 20~40명
- 학습목표

· 우리에게 주어진 정치공동체로서 국가의 주권자이자 국가에 대한 책임과 의무의 담지자이기도 한 시민의 실존 형태를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같이 관찰한다.

·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토대인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이 국가 시민의 주권이 구체적인 생활 상황에서 어떻게 관철되거나 되지 않는가를 탐색한다.

학습개요 : 한국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가 쟁취되고 실현된 현장에서 형성된 시민민주주의의 고전과 대한민국 헌법을 독해하면서 시민정치의 이념과 실재를 탐구한다.

- 세부일정표

회차	진행일	주 제	강의명	강사명(이력)
1차. 민주국가의 주권자로서 시민				
1	03/30	민주주의와 시민	문명 발전 : 정치공동체 권력결속의 극대화로서 민주주의와 시민 요건으로서 덕 / 고대 민주주의의 성공과 실패 :	홍윤기 (총괄자)

			아테네 민주주의와 로마 공화국, 그리고 요순 시대와 단군조선	
2	04/06	시민위상의 진화	현대 민주주의로의 도약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 권력과 권리 또는 주권과 인권 - 루소, 칸트, 소로우	
3	04/20	대한민국 민주주의	반민주세력에 대한 민주화 투쟁의 자생성과 주권자 위상 공고화 : 대한민국 현대사의 7대 반민주 세력	
4	04/27	시민주권	시민민주주의로 본 대한민국 헌법: ‘더 좋은, 더 많은 민주주의’	
5	05/11	시민가치	가치공동체로서의 민주주의의 헌법적 근거 : 10대 시민적 규범가치	
2차. 민주국가의 작동 : 주권 행사의 양과 질				
6	05/18	권리/의무	“개인의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의 확인과 보장이 “국가의 의무”인 이유는 무엇인가?(헌법 제10조)	총괄자+강사
7	05/25	선거/정당	대한민국 헌법의 선거/정당 제도는 주권의 적절한 행사를 보장하는가? - 헌법 제8조(정당), 제24조(선거권), 제41조(국회의원) 및 제67조(대통령)	총괄자+강사
8	06/01	평등/약자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 특히 약자에게 평등을 보장하는가? - 헌법 제11조, 제31조, 제32조, 제34조, 제39조(병역)	총괄자+강사
9	06/08	평화통일	평화통일은 정권마다 달라질 수 있는 정책인가 헌법적 원칙인가? - 헌법 제66조 ③항(대통령) 및 제92조(민주평통자문회의)	총괄자+강사
10	06/15	경제민주화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은 대한민국 경제질서와 우리시민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 헌법 제23조, 제119조	총괄자+강사

※ 휴강일 : 4월 13일, 5월 4일

3. 강좌3 : [시민실천론] “시민이 주인 되어 돌볼 일” - 시민권능으로 문제 풀기

- 강의 일시: 2016년 3월 30일 ~ 6월15일. 시간 : 매주 수요일 20:00 - 22:00
- 강의 장소: 동국대학교 신공학관5147 (401-5147)
- 참여 인원: 20~40명
- 학습목표

· 갈등상황의 이해력 증진

· 공적으로 중대한 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할 시민적 권능의 강화

□ 학습개요 : 시민정치 10대 쟁점을 선정하여 민주시민교육 방법에 의거하여 실제로 운용하는 일종의 실습 과정으로서 교육과정 운영 중에 수강자들의 의사 및 시민교육론과 시민정치론 수업의 진행 내용 및 분위기에 따라 쟁점 현안이 교체될 수 있음.

□ 세부일정표

회차	진행일	주 제	강의명	강사명(이력)
1차. 시민정치 쟁점1. 민생				
1	03/30	경제 성장	경제 성장, 어느 정도 가능한가?	총괄자+강사
2	04/06	저출산	서기 2,300년, 대한민국은 없어지나?	총괄자+강사
3	04/20	조세정의	세금은 어디에 써야 하며, 복지는 세금 낭비인가?	총괄자+강사
4	04/27	경제 불평등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총괄자+강사
5	05/11	노동시민	전태일 분신 45년, 대한민국 노동시민의 생활 상황은 얼마나 개선되었나?	총괄자+강사
2차. 시민정치 쟁점2. 지구적/국가적/국지적 쟁점				
6	05/18	에너지 갈등 Global	이 지구에 에너지는 풍부한가? - 원자력은 최종에너지인가?	총괄자+강사
7	05/25	분단/평화 National	북한 핵 없는 한반도 평화는 어떻게 만들 수 있나?	총괄자+강사
8	06/01	교육 Social	아이들의 성장과 성숙을 보장하는 학교의 모습은 무엇일까?	총괄자+강사
9	06/08	주민자치 Local	우리 시민에게 생활을 돌려줄 수 있는 방책은 무엇인가? - 주민자치 쟁점 추출 실습 / 학습자 주거지 및 활동지	총괄자+강사
10	06/15	기본소득 Social/Local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제가 청년과 도시에 희망일 수 있는가?	총괄자+강사

※ 휴강일 : 4월 13일, 5월 4일